

# 정치학

2025. 2. 18.

## <제목 차례>

1. 정치와 정치체계, 국가, 정치문화, 정치발전 .....	1
가. 정의 .....	1
나. 정치체계 .....	1
다. 국가론 : 국가의 구성 요소 .....	1
라. 정치문화이론 : G. Almond & S. Verba .....	1
마. 정치발전 .....	3
2. 정치권력론 .....	4
가.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수단 .....	4
나. 정치권력의 운동법칙 .....	5
다. 엘리트주의 .....	5
3. 정치사상 .....	7
가. Aristotle .....	7
나. 마키아벨리 .....	7
다. 사회계약론 일반 .....	8
라. T. Hobbes [2014-A-서술3] .....	8
마. J. Locke [1996-32] [1999-7] .....	9
바. J. Rousseau .....	11
사. 자유주의 .....	12
아. 공동체주의 [2015-A-기입3] .....	15
자. 토의민주주의 [2018-A-2] .....	16
차. 기타 정치사상 / 이데올로기 / 정치경제 모델 .....	18
4. 민주주의론 .....	20
가. 민주주의의 개념(M. Rejai) [1996-16] .....	20
나. R. Dahl 민주주의 최소강령적 정의 .....	20
다. 민주정치와 원리 .....	20
라. 의사결정 : 다수결의 원리 [1993-24] [2007-10] .....	20
마. 민주 정치의 이념 .....	21
바. 민주주의의 유형 .....	21
사.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	23
5. 정부형태 [2023-B-11] .....	25
가. 대통령제 .....	25
나. 의원내각제 [1999추가-9] .....	26
다. 의원정부제 .....	28
라. 우리나라의 특징 .....	28

마. 의회 관련 개념 .....	29
바.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 구분 .....	29
6. 선거 .....	31
가. 선거의 원칙 .....	31
나.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의 역할 .....	32
다. 선거구 획정의 원칙 .....	33
라. 선거 제도의 구성 요소 .....	33
마. 선거구의 종류와 대표 결정 방식 .....	33
바.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 .....	37
사. 정당공천제 .....	37
아. 합리적 투표자 이론 .....	38
7. 정책과정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대중매체 .....	39
가. 정당의 의의 .....	39
나. 정당의 유형 .....	39
다. 정당체계 .....	40
라. S. M. Lipset & S. Rokkan : 정당체계의 지속과 변화 .....	41
마. 이익집단의 발생 배경 .....	41
바. 이익집단의 형성 .....	41
사.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활동 목표와 기능 [공사 2002-15] [2002-9] [2004-8] [2024-A-8] .....	42
아. 정책결정과정: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	42
자. 정치참여의 형태 [1995-52] [1995-53] .....	44
차. 대중매체 .....	44
8. 국제정치 .....	45
가. 국제연합 .....	45
나. 국제 관계의 변천 .....	46
다. 국제 사회의 행위주체 .....	46
라. 현실주의 [2018-B-2] [2023-A-8] .....	47
마. 자유주의 [2018-B-2] .....	49
바. 구성주의 (A. Wendt) .....	51
사. 국제정치경제 .....	51
아. 기타 .....	51

- 입헌주의나 우리헌법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법학에 배치했다.

- 정치/사회발전론 중 G. Almond, S. M. Lipset, S. P. Huntington, G. O'Donnell의 견해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학으로 배치를 일원화했다.

- 객관식 시절의 너무 무의미한 극히 일부의 선지들이나, 이론에 근거한다기보다 독해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자료의 저작권은 김근홍(admin@folderfile.net)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무단 전재 및 재배포나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 1. 정치와 정치체계, 국가, 정치문화, 정치발전

## 가. 정의

### 1) Ea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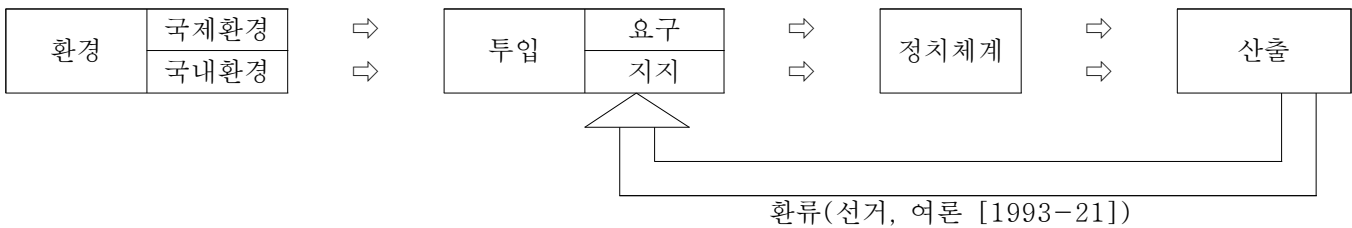
- 권력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권력은 합리적 설득을 통해 일어나는 영향력과는 달리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것과 같은 강제나 조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위**는 어떤 강요나 조작의 형태라기보다는 복종에 대한 승인된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18-A-1]
- 이스턴은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력의 속성을 고려하여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1993-21] [2018-A-1]

### 2) Lasswell

- 정치란, 누가 언제 무엇을 얻느냐는 문제이다.
- 정치는 별거벗은 권력이다.

## 나. 정치체계

### 1) Easton



## 다. 국가론 : 국가의 구성 요소

### 1) 국민

### 2) 영토

### 3) 주권 [2024-A-9]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
-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가진다. [2001-12] [2004-12]
-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진다. [2004-12]

## 라. 정치문화이론 : G. Almond & S. Verba

### 1) 정치문화의 구성요소

- 인지적 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

### 2) 정치문화 유형 구분의 기준 [2006-10]

- 아래 4개 기준에 대해 국가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정향(지식,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정치문화의 유형을 구분한다.
- 정치체계 [1998-6]
- 투입 : 정치의 구조와 기능, 정치 엘리트, 정책제안 [1998-6]
- 산출 : 정책 집행의 과정과 결과 및 영향 [1998-6]
- 정치행위자로서의 자신 [1998-6]

### 3) 정치문화의 유형 [1995-54] [2006-10]

- 지방형 [2006-10] : 정치체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낮음. 전통사회
- 신민형 [2006-10] : 정치체계와 산출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참여는 낮음. 중앙집권적, 권위적, 과도기 사회
- 참여형 [2006-10] : 정치체계와 산출, 투입에 대한 인식이 있고, 참여도 높음. 민주적, 현대사회.

	정치체계	투입	산출	정치행위자로서의 자신
지방형	X	X	X	X
신민형	O	X	O	X
참여형	O	O	O	O

### 4) 혼합된 형태

- 지방-신민형
- 신민-참여형 : 국가의 충성심과 일체감을 고취시킨다. [1998-6]
- 지방-참여형

### 5) 한계

- 한국 정치문화의 지역주의 때문에, 아몬드와 버바가 제시한 정치문화의 유형에 따라 한국의 정치문화를 분석·설명하기 어렵다. [2006-10]

## 마. 정치발전

### 1) G. Almond

#### 가) 정치체제의 능력

-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출능력, 규제능력, 분배능력, 상징능력, 반응능력, 국내적·국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 2006-15]

### 2) S. M. Lipset 경제결정론

#### 가) 기본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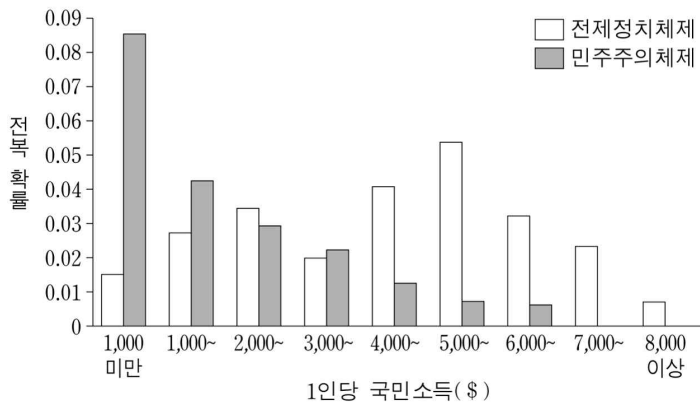
-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민주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근대화론 입장

#### 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

- 부 :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공고화)이 높다. [2013-1차-13]
- 교육
- 산업화 [2007-12]
- 도시화 [2007-12]

[2013-1차-13] (쉐보르스키와 리몽기의 연구결과)

<1인당 국민소득과 정치체제 유형별 전복 확률>



#### 다) 안정성 여부 : 효율성, 정통성

- 효율성 : 정치체제가 대다수의 국민과 대기업 또는 군대와 같은 체제 내부의 강력한 집단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통치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 [공사 2006-15]
- 정통성 [공사 2006-15] : **현 정치체제가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을 낳게 하고, 그것을 줄곧 지속하게 하는 체제의 능력 [공사 2006-15]

### 3) S. P. Huntington

#### 가) 제도화 [2015-A-기입4]

- 조직과 절차가 가치와 안정성을 얻는 과정 [2015-A-기입4]
- 제도화 수준은 **적응성(adaptability), 복잡성(complexity), 자율성(autonomy), 응집성(coherence)**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A-기입4]

#### 나) 비판

-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2015-A-기입4]

### 4) G. O'Donnell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60년대 이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 같이 외관상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에서 오히려 군사정권이 등장하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
- 관료적이라 함은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가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관료에 의해 처리됨을 뜻하고, '권위주의적'이라 함은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폐쇄 내지는 유보된 상태에서 폭력적이고도 장기적인 군부독재가 통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 2. 정치권력론

### 가.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수단

#### 1) Weber [1992-20]

##### 가) 전통적 권위 [공사 2005-25] [2021-A-7]

-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 등에 기반하여 전통적으로 부여된 권위 [2021-A-7]

##### 나) 카리스마적 권위 [공사 2005-25] [2021-A-7]

- 국민들로부터 직접 지지와 복종을 확보할 수 있는 초인적인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개인적 힘에 의존한 권위 [2021-A-6]

##### 다) 법적-합리적 권위 [2021-A-6]

-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법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대 국가들에서 기능하고 있는 전형적인 권위. [2021-A-7] →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시에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결정할 뿐 아니라, 권력행사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부여한다.

[공사 2005-25]

‘승리의 황소’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세티는 열 발자국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적들은 꼼짝 못하고 몸이 굳어버린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 큰 키, 근엄한 얼굴, 높은 이마, 매부리코, 푹 튀어나온 광대뼈. 세티는 권위의 화신이었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인 그는 이집트에 과거의 영광을 되돌려준 군주였다. …… 야생동물과 파라오, 과연 어느 쪽이 더 두려운 존재일까? 황소와 왕에게서는 모두 강력한 힘이 흘러나왔다. …… 이야기꾼들이 말하지 않던가? 황소는 다른 세계의 불로부터 힘을 얻는 천상의 동물이라고, 그리고 파라오는 신들의 형제라고 말이다. - 『람세스』 -

#### 2) C. E. Merriam 상징조작에 의한 정당화(miranda/credenda) [1992-31]

##### 가) miranda

- 인간의 정서적·비합리적 측면에 호소하는 동일시의 상징을 이용하여 정당성을 획득한다.

\* 예시

- 대중적 시위 [1992-31] [1996-20]
- 각종 기념일의 설정 [1992-31] [1996-20]
- 역사의 미화나 왜곡 [1992-31]
- 특정 음악 장르 [1996-20]
- 제복, 동상

##### 나) credenda

- 인간의 합리적 측면에 호소하는 합리화의 상징을 이용하여 정당성을 획득한다.

\* 예시

- 정부에 대한 존경 [1992-31]
- 군대의 경례제도 실시 [1996-20]
- 사회계약론에 의한 복종 [1996-20] → 헌법 제정
- 왕권 신수설에 의한 합법성 [1996-20] → 정치적 이데올로기

#### 3) 권력의 정당성

- 합법성(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성(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2006-11]



## 나. 정치권력의 운동법칙

### 1) 권력의 확장 운동 [공사 2007-1]

- 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하여 권력의 제한이 필요하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헌주의를 통해 헌법으로 제한한다.

### 2) 권력의 집중 운동 [공사 2007-1] [2007-9]

- 정치권력은 항상 특권적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1-1차-14] → 과두화 초래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2007-1] 권력의 분산이 요구된다.

### 3) 권력의 지속 운동 [2007-9]

- 권력의 영구화를 초래하여 권력의 변경이 필요하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

[공사 2007-1] [2007-9]

카이사르는 국내 계급투쟁을 해소하고 광대한 로마 세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관이 600여 명으로 구성된 공화정보다 단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제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기원전 44년 ‘딕타토르 페르페투아’가 된 카이사르는 지난 450년 동안 존속된 공화정에서 6개월로 제한되었던 단독 행정직의 권한을 무기한 누리며 금융, 행정, 사법,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다. 엘리트주의

- 지배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항상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소수 엘리트 집단이 다수 피치자 집단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022-A-7]

### 1) Plato 철인정치

- 정의란, 폴리스에서 조화와 절제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천성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합한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 도시국가의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지혜는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특별한 지혜로, 소수의 철학자만 보유한다. → 철인정치 필요
- 용기는 보조적 수호자인 군인이 보유한다.
- 절제는 다수 생산자가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절제는 철학자와 군인도 모두 지켜야 한다.
- 최악의 부정의는 장사꾼이 지배자나 군인이 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2004-15]

... 나라는 개인보다 큰 것이 아닌가? ... 자, 그러면, 나라라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자기 혼자만으로는 자급자족하기 어렵고 자연히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지. ... 그런데 ... 어쩔 수 없는 고상한 거짓말이 필요하네. ...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형제이긴 해도, 신께서는 ...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들에게 황금을 섞으셨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해서 그들은 가장 귀한 존재이다’라는 ...

## 2) 고전적 엘리트주의: V. Pareto 엘리트 순환론 [2022-A-7]

- 엘리트 지배의 근거를 정치·사회·경제 상황과 필요, 국민의 선택, 정치제도, 정치문화 등이 아닌 엘리트의 재능과 심리적인 특성에서 찾는다. [2013-1차-14]
- 인간을 감정이나 본능에 따라 비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보거나, 일반 대중을 자치능력이 없어 엘리트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담긴 평등주의적 가치를 비판하며,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3-1차-14]
- 엘리트 집단은 피치자 집단으로부터 보충되거나 총체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2022-A-7]

### \* 여우형 엘리트 / 사자형 엘리트

- **여우형** 엘리트 : 약삭빠르고 혁신적이며 수완이 풍부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공사 2005-22]
- **사자형** 엘리트 : 강력한 힘을 통해 집단의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공사 2005-22]
-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는 두 엘리트 간의 투쟁으로 일어난다. [공사 2005-22]

## 3) Michels 과두제의 철칙 [2010-1차-31]

-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거대한 조직이나 단체의 운영이 복잡하고 전문화되므로 관료제화된다. → 관료제로 인하여 과두제는 필연적이다.

## 4) C. W. Mills, F. Hunter 권력엘리트 이론

- 정치과정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집단, 대기업, 군부'로 구성된 응집적인 권력엘리트(power elite)가 다수 국민을 배제한 채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2013-1차-14]
- 선거로 표출되는 유권자들의 압력은 의회, 주정부, 지방정부 같은 '중간 수준의 권력'에 흡수되고, 노동자·소기업·소비자 단체들은 정치과정에서 주변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는 데 주목한다. [2013-1차-14]
- Hunter는 **지역사회 권력 구조에서 경제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Mills는 여러 분야를 포함한 **권력 엘리트**에 관심을 두었다.

### \* 엘리트 지배에 대한 비판 [2004-15]

- 중요한 정책문제를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관련없이 결정하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다.
- 대화와 토론 등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다.

## 5) J. Schumpeter 경쟁적 엘리트주의

- 민주주의는 정치평등, 대중참여, 자유 등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정치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 관점은 시장경제원리를 응용하여 정치 관계를 기업가로서의 정치가와 소비자로서의 투표자 관계로 설명하려는 이론을 발전시킨다. [2013-1차-14]
- 엘리트는 경쟁적 집단과 이익집단의 지도적 인물들로 구성되지만 분열되어 있고, 이들 간의 선거 경쟁이 민주적인 지배를 보장한다.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적 책임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며, 선거와 정당만으로 민주국가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2011-1차-14] [2013-1차-14]

### 3. 정치사상

#### 가. Aristotle

-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 국가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2013-1차-12]
- 시민이란 “사법적 또는 심의적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있는 사람”이다. 시민들의 통치는 “변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을 뜻한다.

정치체 분류 [2025-B-6]		
지배자 수	통치 목적	
	공동선 추구	당파이익 추구
1인	군주제	폭군정
소수 (과두정)	귀족제	금권정
다수	polity	민주정 (democracy)

- 진정한 군주제는 이론으로만 가능하다. 법에 의한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을 때에 군주제가 좀 더 잘 실행된다.
- 대부분의 폴리스는 민주정과 과두정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는 지배자 숫자가 아니라 지배 계급에 있다. 민주정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지배, 과두정은 소수의 부자들에 의한 지배이다.
- 정체는 공동선(공익)을 추구하는 한 올바른 정체이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폭정이 된다.

#### \* polity / 혼합정체 [2008-8] [2025-B-6]

- 실현 가능한 가장 좋은 정치체.
- 공익을 추구하는 다수의 지배. [2025-B-6]
- 관직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민주정과 과두정의 원리를 결합한다.** [2013-2차-2] [2025-B-6]
- 집정관이나 군대 사령관 같은 관직은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개방하여, 특정 계급의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봉쇄할 수 있다. → 계급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고 공존하기 때문에 계급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 가난한 계층의 독단적 지배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고 부자들 에게도 정치 참여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2025-B-6]
- 중간계층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극단적 관점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여 이성적 토론으로 통치해야 한다.

#### \* 고전적 공화주의

-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며,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 나. 마키아벨리

##### 1) 기본입장

- 국가는 자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인위적 창조물이며 ‘숙고와 계산의 결과’이다. ↔ Aristotle
- 국가 유지의 필수 조건은 ‘잘 정돈된 군대’ → ‘시민군’이 국가의 필수 요소
- 공적 생활과 도덕적 생활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공공질서를 위한 ‘악의 필요성’을 인정 → 사적 생활의 평가 기준을 국가정책 판단에 적용 불가 → 군주가 진정으로 신민을 위한다면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 **공화정(혼합정)이 최선** → 정치의 항구적 요소는 ‘불안정성’(↔ 플라톤), 따라서 탄력적인 공화제가 좋다.

##### 2) 환경과의 투쟁 : Fortuna와 Virtu

- **Fortuna** : ‘운명의 여신’ = ‘환경의 제약’. 운명은 특별한 상황 그 이상의 것으로 ‘가변적’이며, 가변적인 부분을 변동시키는 것이 정치가의 능력이다.
- **Virtu** : 용맹, 자질, 명석함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

## 다. 사회계약론 일반

- 정치 권위체가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 권위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기본 명제이다. [1995-34]

	Hobbes	Locke	Rousseau	Rawls
자연상태	전쟁상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편	평등하지만 소유권이 전쟁 유발	
자연권	생명보존을 위해 행동할 자유	천부적인 재산권 보유	생명보존	
사회계약	안전확보 위해 권리를 리바이어던에게 양도	재산보전 위해 입법부에 위임	불평등 극복 위해 자연권 양도 후 주권 획득	
저항권의 근거	생명보전을 위해	재산권 보전을 위해	권력행사가 일반의지에 반한다면	
동의	명시적 동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가상적 동의

## 라. T. Hobbes [2014-A-서술3]

### 1) 자연상태

- 인간은 인지적 힘과 정념, 심사숙고와 의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끊임없이 죽도록 권력을 추구**'한다. 절대 권력에 의해서만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육체적·정신적 능력에서 평등하다고 전제된다. [2013-1차-12] → 타인에 대한 자신감 → 물리적 동원으로 획득경쟁 → 불신 만연 → 방비 노력 → 약탈의 회열 → 영광을 욕망 → 치절한 투쟁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서 전쟁상태.
- 옳고 그름도, 정의나 부정의도 없다. [2013-1차-12]

### 2) 자연권과 자연법

- 자연권이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힘을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사하고 소유하는 자유이다. [2014-A-서술3]
-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규칙으로, 자연권과 호전적인 정념의 행사를 제한하도록 유도한다.
- 그러나 자연법은 외적 강제력이 아니어서 취약하므로 계약을 지키도록 강제할 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구성해야 하며, 사회계약을 강제할 권력으로서 Leviathan이 필요하다.

### 3) 사회계약

- 사회계약은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며, 개인들 스스로 계약을 맺어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며, 개인과 주권자의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개인에게 아무런 계약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Leviathan의 **주권** [2004-12] : 자연인이 자연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성된다. **평화와 방위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갖는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절대군주의 형태로, 시민은 자유로운 신분에서 종속적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 홉스처럼 '동의'를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로 해석하는 한, 정치권위체의 형성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소수의 독재(tyranny of minority)를 막을 수 없다. [1995-34]

### 4) 저항권

- 시민은 Leviathan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지만, 그 자연권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양도되지 않은 잔여 권리로서 '자신을 죽음과 부상, 투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고유 권리'인 **저항권을 여전히 보유**한다.

### 5) 예시

- 인간을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상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수여해서 그들 모두의 의사를 단일의 의사로 하는 것이다. ... 그리고 그러한 범위 안에서 만인은 그들의 의사를 그의 의사에,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그의 판단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 다수는 국가, 라틴어로 <CIVITAS>라고 불린다. ... 이러한 인격을 획득하는 사람은 ... 주권을 소유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2004-12]
- 자연상태에는 권력도 법도 없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곳에서의 삶은 고독하며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다. ....(중략)..... 인간이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이유는 자연상태의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사람 또는 합의체를 임명하여 자신들의 인격을 위임하고, 그 위임 받은 자가 공공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든 또는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든, 모든 것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2013-1차-12]
- 자연 상태는 인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태이다. 인간 행위의 동기는 자기 이익과 공포이며, 권력 추구이다. ...(중략)... 인간의 결합은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며, ...(중략)... 하나의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결합이다. 계약에 의해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져 다수가 한 사람으로 통합되면 ...(중략)... 그것이 주권자의 탄생이며, 주권자는 법과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중략)... 선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자의 소관이다. 법은 주권자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렇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법을 부정의(不正義) 하다고 말할 수 없다. [2014-A-서술3]
-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공격해 오는 자들에게 저항할 권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죽음, 부상, 투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마. J. Locke [1996-32] [1999-7]

### 1) 등장배경

- 봉건국가체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공사 2004-19]
- 자유주의 사상에 속한다. [2009-1차-17]

### 2) 자연상태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에서부터 추방되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는 없다. [2004-15] [2006-9] [2009-1차-17]
- 자연 상태란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그것은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한데, 거기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다. [2014-A-서술3] → 자연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 3) 자연권과 자연법

- **재산권**은 천부적인 권리인 자연권으로, 유/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 자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사 2004-19] [2013-1차-12] [2014-A-서술3]
-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법을 스스로 집행했다. 그러나 **법, 공정한 재판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불편** 때문에 인간들은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에 일정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동의했다. [공사 2004-19] [2004-15] →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를 누리게 된다.

### 4) 사회계약

-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1999-7] [2014-A-서술3]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잘 보존하겠다는 의도에서 양도하는 것.
-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신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또한 그 공동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더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안락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려는 데 있다. [2006-9]

- 로크처럼 '동의'를 묵시적 동의(tacit consent)로 해석하는 한, 이 세상의 어떠한 정치 체제도 만장일치의 동의에 기초할 수 있으므로, 스탈린이나 나찌의 정치체제도 정당한 정치체계가 될 수 있다. [1995-34]

## 5) 저항권

- 국가 권력에게 '판단권'과 '처벌권'을 양도하는데 이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가가 인민의 신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 만일 입법부가 야망,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 ...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국민이 그들에게 양도해주었던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민에게 귀속된다. [공사 2004-19] [2004-15] [2009-1차-17]

## 6) 예시

-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법을 스스로 집행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불편 때문에 인간들은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에 일정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동의했다. 즉 인간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자연법을 집행할 행정권을 양도한 것이다. 이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 중 명시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인민들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이를 침해할 경우 인민은 정부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전복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공사 2004-19]
-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독립적이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해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자연법이 있다. ...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이들의 향유가 불안하고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단결해서 ...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 만일 입법부가 야망,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 ...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국민이 그들에게 양도해주었던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민에게 귀속된다. [2004-15]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에서부터 추방되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는 없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신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또한 그 공동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더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안락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려는 데 있다.
  - 로크, 『시민정부론』 - [2006-9]
- 자연 상태란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그것은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한데, 거기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다. ...(중략)...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2014-A-서술3]

## 바. J. Rousseau

### 1) 자연상태

- 자연인은 미덕도 악덕도 모르고, 신체적 불평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같이 살기 위해 오두막집을 발명했고 이 때 **소유의 관념이 탄생**하였다. → 자연적 자유
- 이러한 사유재산이 인간불평등의 기원을 형성한다. [2011-1차-13]
- 재산의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부자와 빈자의 투쟁이 격화되고 **자연상태 말기에는 전쟁상태**가 된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빈자들을 기만하는 술책을 사용하여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를 수립하고 불평등을 제도화한다. → 자연적 자유 사라짐. 로크의 소유권 이론을 비판하였다. [2011-1차-13]

[2011-1차-13]

[자연상태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이 따온 과일이나 죽인 짐승, 숨어 살던 동굴을 가로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인간을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어떤 종속 관계의 속박이 있을 수 있겠는가?

[2011-1차-13]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찾아낸 최초의 사람은 정치사회(국가)의 창립자였다. 말뚝을 뽑아내고, 개천을 메우며 "이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는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는다면 너희들은 파멸이다!"라고 동포들에게 외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공포를 인류에게서 없애 주었겠는가?

### 2) 사회계약

-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정치제도는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졌으므로 변혁되어야 한다.
-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고,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으며,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2017-B-3] → 불평등 극복 필요
- 모든 사람의 힘과 신체를 공동의 것으로 삼고, 이를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는 구성원들을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인다. [2017-B-3]
- 시민들과 주권 사이에 어떠한 이익 충돌도 없고, 자기 자신과의 자발적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치질서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개인은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항상 자유롭다. 일반의지와 개인의지가 충돌하면, 일반의지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전체에 의해 복종을 강요당해야 한다. 이것은 그 시민이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전체가 강요하는 방식으로 공공선이 실현된다는 뜻이다(시민적 자유 획득). [2011-1차-13] [2017-B-3] [2023-A-7]
- 사회를 구성할 때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사회에 양도하고 사회로부터 주권을 부여받는다. 이 주권은 개인이 아닌 전체시민에게 부여되고 전체시민이 일반의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시민 개인들에게 분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일반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생각하지만, 전체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의 총화이다. [2011-1차-13] [2023-A-7]
- 법률은 일반의지의 한 행위이며 '인민은 법률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을 기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023-A-7] → 의회는 선출되어서는 안되며 인민의 집회로 제정해야 한다. ↔ 로크는 시민대표에게 위임

### 3) 저항권

- 정부는 주권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일반의지의 주권력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모두 부당하지 않다.
- 민주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위협하므로 우려할 만하다. 민주제는 작은 규모라는 자연적 요건과 검약하고 사치

- 하지 않는 시민들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혜택서 상당한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주제에 필요한 시민정신은 먼 곳에 있다. 일반의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 → 2권분립
- 정부가 주권을 찬탈할 때, 사회계약은 끝장나고 시민들은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누렸던 자연적 권리를 되찾아오게 된다.

#### 4) 예시

-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권력과 함께 자기자신을 전적으로 그 결사에 양도한다.”
-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의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
- “공동의 집단적인 힘을 모아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결사를 만들어낸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여전히 그전과 다름없이 자유롭다.”
- ‘각인은 그 자신을 전체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무에게도 포기하지 않은 셈이다.’
- “각 구성원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양도해야만 한다.”
- “일반의지는 공공 이익만을 강구하지만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노린다.”
- 새로운 사회계약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의지의 최고의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 [2011-1차-13]
-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사회 전체가 복종을 강요할 때, 자신의 의지가 포함된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 의지에 복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2017-B-3]

### 사. 자유주의

-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사회 제도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 개개인은 각자 자기완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간관, 원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정치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치관, 개인의 자발성 보장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조건이라는 사회관 등을 전제하고 있다. [2012-1차-12] [2021-A-7]

사회의 발전보다 개인의 권리를 궁극적 기준으로 본다. [2012-1차-12]

개인의 자유는 ‘자연적’이며 타고난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정당성은 개인의 삶에 개입하기보다는 그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위협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2009-1차-17]

사회적 일체감의 관점에서 자아의 본질을 정의한다기보다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자아의 본질을 정의한다. [2012-1차-12]

민주주의를 위해 자율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위해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2012-1차-12]

특정 사회의 공유 가치 기준에 기초하여 가치를 정당화한다기보다 모든 사회에 보편적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2012-1차-12]

#### 1) J. Bentham 양적 공리주의



## 2) J. S. Mill 질적 공리주의

### 가) 자유의 개념

- 역사적으로 자유는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피치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인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또한 파면할 수 있음으로 하여 인민과 정부 간의 대립은 종식되었다.
- 그러나 **대중에 의한 정부에서도 사회내 '다수의 횡포' 가능성은 존재하며**, 개인은 “사회속에서 우세하게 떠도는 여론과 감정”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 **소수자 보호 가능한 대의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 [2010-1차-17] → 표현의 자유 중시
-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다수결 원리는 자의적 정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자유를 유지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가 공적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2010-1차-17] [2012-1차-14] → **차등투표제**(소수 엘리트의 지성 보호)와 **비례대표제**(소수 억압 방지) 도입의 필요성 [2010-1차-17]

### 나) 자유의 기본 원리

-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자”이다.(계약의 원칙)
- 다른 사람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자유가 가치 있기 위해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자유를 누려야 한다. [2010-1차-17]

‘자유’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2010-1차-17]

### 다) 자유의 제한(계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경우 가능)

- 모든 인류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교양인만 자유를 누린다) → 식민통치 정당화
-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다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선동) 이를 금지할 수 있다. → 어떠한 의견이라도 침묵시킬 수 있음
-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 여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풍기문란 등)
- 개인은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사회와 구성원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라) 질적 공리주의

- 자유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행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 공리를 판단하는 기준: 인간의 “정신적·윤리적·심미적 성장”. [2010-1차-17] 플라톤처럼. →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좋다. 만족한 어리석은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좋다.”
- 쾌락증대와 고통감소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벤담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벤담은 쾌락의 질이 아닌 양을 고려하여 모든 쾌락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제도용 편이 제공하는 쾌락은 시가 제공하는 쾌락만큼 좋은 것이다.”

[2023-A-7]

한편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공선을 모두 또는 다수에게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선은 어떤 사회의 총체적 효용(aggregate ut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선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 3) T. H. Green 적극적 국가론

- 자유는 가치 있는 것을 행하고 즐길 수 있는 '적극적' 능력이다. 공동선은 집단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국가는 정책을 통해 개인 이익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자유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2009-1차-17] ↔ Locke?
- 복지국가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2009-1차-17]

### 4) J. Rawls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 가) 이론적 전제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1996-31]: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자신의 목표와 정의감이 있으며, 타인에 대해서는 시기심도 이타심도 없는 상호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1996-31]: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질, 능력, 지능, 체력도 알지 못하는 상태.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이라 심리적 성향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

#### 나) 정의의 원칙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 원초적 입장의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자신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배정한다는 가정 아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제1원칙(자유 원칙):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016-B-2]
  -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평등
  - 제1우선성 규칙에 의해 자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은 교환될 수 없다.
- 제2원칙(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2016-B-2] →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특히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공리주의적 관점 배제(정의롭지 못함).
  - ① (최소극대화 원칙)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하고 [1996-31] [2016-B-2]
  - ②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서 직책과 직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2016-B-2]
    - 제2우선성 규칙에 의해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고용증진과 신상품 생산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가 최소수혜자들에게 고용기회와 수입증가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기업가들은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 이 경우에 세금 유인책과 낮은 세율 정책이 자본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은 이 경우에 최소수혜자들의 전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자본투자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와 힘의 측면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할 것이지만, 최소수혜자들의 기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 다) 사회계약

- 롤즈처럼 '동의'를 가상적 동의(hypothetical consent)로 해석한다면, 가상적으로 동의된 정치체제의 구성원칙이 과연 유일무이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란거리가 생긴다. [1995-34]

### 5) 신자유주의 [2008-9]

#### 가) 주요 특징 [1999추가-14] [공사 2008-21]

-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공공지출과 복지정책을 축소한다. [2008-9]
-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성, 성장,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2008-9]
- 탈규제, 공기업 민영화, 포괄적 세금인하정책을 시행한다. [2008-9]

## 아. 공동체주의 [2015-A-기입3]

-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개인주의·이기주의·비사회적 존재(무연고적 자아)로 본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는 특정한 의무나 책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권리의 정치는 공동선의 정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 국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자유주의 입장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만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에 참여는 “좋은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 공동체주의는 그에 더해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중요시한다. → 가치가 특정 공동체의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바라봄. 자유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함.
- 공동체주의 비판: 개인의 자유·권리가 억압되는 정치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

### [2015-A-기입3]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사조로서 도덕적 사회의 와해와 이기주의의 팽배 등의 현상에 대한 불만을 이론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개인이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고려하도록 허용되는 사회는 도덕적인 공백 속에서 와해된다. ‘권리의 정치’는 ‘공동선의 정치’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간 존재의 사회적 성격을 모두 인정한다. 개인의 자유는 ‘시민사회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시민들은 시민사회 속에서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시민적 책임 의식도 함양하게 된다.

## 1) 참여민주주의

- 지금까지의 자유 민주주의의 고전 이론에 반대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민주주의의 본래 이념이나 목적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과제를 안고 정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1994-26]
- 참여민주주의는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1994-26]
- 자유와 자기 계발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하며 집단적 문제와 통치 과정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2012-1차-14]

자신의 농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된 농민이 1인 시위를 통해 그린벨트 재조정을 이끌어 냈다. [2012-1차-14]

## 2) B. Barber 강한 민주주의 / 약한 민주주의

- Barber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즉 약한 민주주의를 참여와 시민의식의 연대에 기초한 강한 민주주의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공동생활과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 참여 없이는 개인으로 될 수 없는 존재이다.
- **강한 민주주의는** “독립적인 판단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기입법예의 참여과정과, 의존적이고 사적인 개인들을 자유로운 시민으로, 또 부분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들을 공공선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창출을 통하여 갈등이 해결되는 참여적 형태의 정치”로 정의된다. [공사 2003-14]
- 강한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의 수동성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정치의 주요 덕목으로 강조한다.

바버는 대의민주주의를 ‘약한 민주주의’로, 자신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시민정신, 특히 정치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관심사를 공유하고 만나서 토론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은 풍부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가 단지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표하지 못하고 의회가 행정부에 비해 무기력하다는

## 자. 토의민주주의 [2018-A-2]

### 1) 기본입장과 의의 [2012-2차-2]

-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토의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변동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선호집약'(투표)보다 '선호전환'(토론)을 추구한다. [2010-1차-20] [2012-1차-14]
- 정치참여 그 자체를 목표로 참여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본질과 방식을 제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토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자치의 핵심요소**다. 이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다. [2018-A-2] [2023-A-7]
-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는 투표나 다수결같은 제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결정에 대해 옹호 가능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한다. [2018-A-2]

### 2) 학자

#### 가) J. Fishkin

-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집단의 엘리트주의를 비판 →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능한 대중과 정치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좀더 유능한 엘리트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
- 선거와 정책결정 과정이 정책원칙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심사숙고를 건너뛴다.
- 다양한 국가에서 토의민주주의의 실천적 이행을 설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8-A-2]

#### 나) J. Elster

- 선거 방식은 정치보다 소비자의 선택과 같아 시장관계에 더 적합하다. 소비는 자신에 관한 것이지만, 정치에 타인에 관한 것으로 올바른 공적 이성에 의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 다) J. Dryzek : 참여민주주의 비판

- ① 고도로 분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면대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이상이 실현될 수 없으며
- ② 소규모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이상화하는 것이 잘못된 것(소규모 민주주의는 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독재에 취약)
- ③ 참여 증대만으로는 참여의 질 문제에 대처하지 못함(토의 부족)

#### 라) J. Habermas: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관점의 민주주의론 비판

##### (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관점의 민주주의론

- 자유주의적 관점: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의 수렴과 제도화된 대의기구를 통한 중재과정이어야 한다. [2010-1차-20] → 개인선호 충족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유권자와 시장 소비자의 선택행위는 동일하다. [2010-1차-20]
- 공화주의적 관점: 정치를 중재기능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로서의 사회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제적인 윤리적 삶의 성찰적 형식으로 이해한다.

##### (2) 비판과 대안 : 절차주의적 민주주의 모델(토의 정치)

- 자유주의 모델은 다소간 현실적이지만 규범적 내용이 약하고, 공화주의적 모델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영하

지만 "과도한 윤리적 부담"에 의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한계를 갖는다.

- 토의 정치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주의적 개념은 자유주의적 공정성(입헌주의적 원리)과 공화주의적 의사형성(민주주의적 공론장)의 요소들을 수용하여 이들을 토론 및 의사결정을 위한 이상적 절차라는 개념 속에 통합하여 두 모델을 보완한다.

### 3) 제도

#### 가) 시민의회 / 공청회

[2010-1차-20]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정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구성하였다. 주 정부는 시민의회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정부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출로 선발된 160명의 시민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의회는 50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총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시민의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여섯 차례의 주말 내부 토론을 통해 단기 이양식 투표제를 새로운 선거제도로 추천하였다.

방패장 선정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 토론장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2012-1차-14]

#### 나) 공론조사

- 전체 시민이 집중적인 토의를 한 후에 어떠한 생각을 할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사
- 1차 여론조사 → 모집단을 통계적으로 대표하는 소우주(microcosm) 구성 → 전문가들과의 대화와 토론 → 참여자들의 토론 → 참여자 대상의 2차 여론조사 → 결과로 공론 도출
- 유권자의 사려 깊은 판단을 대표하므로 일반 여론 조사에 비해 더 큰 권위를 갖는다.

[2010-1차-20]

2001년 2월 호주 국립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발된 사람들을 캔버라에 집결시켜 3일 동안 '토착 원주민과의 화해 정책'에 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토론 결과 원주민들의 불이익을 인식한 사람이 51%에서 82%로, 원주민과의 화해가 호주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한 사람이 31%에서 63%로, 원주민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에서 68%로 급증하였다.

[2012-2차-2]

○○시의회는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보다 폭 넓은 시민의 공감대를 구축한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의원은 과거 향토 축제 폐지 당시에도 여론조사를 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에 논란이 생겼다면 논란을 사전에 없애려면 즉흥적 여론조사 말고 주민 참여와 토론에 근거한 공론조사나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 합의회의는 1998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유전자식품의 안전성과 행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가 처음이며, 시민배심원제는 2004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갈등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2018-A-2]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선택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공사 재개를 결정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가지고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다) 토의하는 날

- 토의적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의하는 날 제정.

- 선발된 500명의 시민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하루 종일 후보 선택에 대해 토의한다. 전국의 라디오와 TV가 이를 중계한다. / 토의 전후의 선호 결과와 선호 전환 이유를 공개한다.

**라) 시민 배심원**

- 긴급 이슈들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평가하거나 제안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소집되며 증거들을 비교 평가하고 관련 주장들을 검토한 후 결론을 제안한다.

**차. 기타 정치사상 / 이데올로기 / 정치경제 모델**

**1) 보수주의**

**가) 신보수주의 [공사 2008-21]**

- 신보수주의는 미국에서 등장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기독교, 가족, 성, 권위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를 중시한다. [공사 2008-21]
- 이것을 추종하는 많은 이들은 과거에는 자유주의자였으나, 케네디(kennedy)와 존슨(Johnson) 대통령 시기의 진보적 개혁정책들이 실패했다고 보고, 미국의 리버럴리즘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대주의를 비판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에 기여했다. [공사 2008-21]

**2) 공화주의**

- 핵심 이념 : 자유, 법치, 공공선, 혼합정, 법의 지배와 준법정신, 다수 의견 존중하면서도 소수와의 공존 추구 등
- 파벌의 폐단: 공통된 열정 또는 이익을 지닌 다수가 약한 정당이나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다수의 지배가 소수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것. [2025-B-6] → 메디슨은 이를 막기 위해 공화정을 제안함. [2025-B-6]

[2011-2차-2]

공화국은 라틴어의 res publica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res(일)와 publica(공공의 또는 인민 모두의)가 합성된 것으로 ‘공공의 일’을 뜻한다. ‘공공의 일’은 인민 모두에 관계되므로 다수이든 소수이든 인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의적 권력을 억제하려 했던 로마의 공화정은 아테네의 민주정과 권력구조가 달랐다. 아테네의 정치권력은 민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로마의 정치권력은 집정관, 원로원 및 민회의 세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리스인이었던 폴리비우스(Polybius)는 로마의 정치체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민주정이라는 단일요소의 순수정(simple government)이었던 아테네와 달리 로마는 민주정, 귀족정 및 군주정의 요소가 뒤섞인 혼합정(mixed government)이었던 것이다. 집정관은 군주정의 요소이고, 원로원은 귀족정의 요소이며, 민회는 민주정의 요소였다. 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로마는 오랫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것이다.

[2013-2차-2]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정부로 순수정체보다는 민주정과 과두정의 요소가 결합된 혼합정체를 옹호하였다. 이러한 혼합정체 사상은 로마의 공화정에서 실제 제도로 구현되었다. 키케로는 로마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민회를 통해 민주정의 자유를, 원로원을 통해 귀족정의 지혜를, 그리고 집정관을 통해 군주정의 대승적 사랑의 장점을 정교하게 결합한 공화정에서 찾았다. 이와 같이 혼합정체 사상은 이질적 요소와 상이한 가치를 조화롭게 접목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25-B-6]

메디슨(J. Madison)은 파벌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정과 공화정이라는 두 가지 정체를 논의하였다. 먼저, 시민들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순수한 민주주의’는 파벌의 폐단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에는 공통된 열정 또는 이익을 지닌 전체의 다수가 약한 정당이나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결합이 있다. 반면, 대의제 정부를 의미하는 공화정은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공화정

은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현명한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영역으로 통치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마르크스주의

- Marx 기본입장은 사회학에서 정리

#### 가)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 사회민주주의 [공사 2008-21]

-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과 국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지지한다. 이것은 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메커니즘으로서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동시에, 시장보다는 도덕적 원칙에 **부를 분배**하고자 한다. 이것은 20세기 초 독일의 베른슈타인(Bernstein) 같은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영향 하에서 태동되었으며, 복지주의, 재분배, 사회정의 등과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개입을 통한 자본주의의 인간화**를 추구한다. [공사 2008-21]
- 산업국유화에 반대하고 복지 수단을 강조한다. [2008-9]

#### 나) 제 3의 길 [공사 2008-21]

- 제 3의 길은 **사회주의가 생명력을 잃었다고** 믿지만, 정부는 **중요한 경제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와 결별한 대신, 기회와 실적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이념을 수용**한다. 즉, '너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라.'는 신자유주의적 태도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공약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슬로건으로 **노동복지국가(workfare state)**를 지향한다. [공사 2008-21]

### 4) 전체주의

\* C. Friedrich & Z. Brzezinski '전체주의적 독재'의 여섯가지 특징 [2005-12]

- 관제 이데올로기
- 단일 대중정당
- 폭력적 경찰제도
- 언론매체의 정부독점
- 군부세력의 독점
- 중앙집권적 경제

### 5) 권위주의

- 민주주의적 의회제를 취하며 일부 집단이 독재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전체주의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 4. 민주주의론

### 가. 민주주의의 개념(M. Rejai) [1996-16]

#### 1) 규범적(고전적)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나 절차와 같은 정치현실로 보지 않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념, 가치, 이상, 목적으로 규정. e.g. 로크, 루소, 링컨, 밀 등.

#### 2) 경험적 민주주의

- 정치운영과정에서 관찰이 가능한 변수로서의 인간 행태의 패턴, 제도,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다. e.g. 슈페터, 달, 립셋 등.

#### 3) 규범적·경험적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e.g. 듀이, 바커 등.

#### 4) 이데올로기적 민주주의

- 가장 비민주적인 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믿게 만든 믿음의 민주주의. e.g. 맑스 등 → 인간의 사고과정이 왜곡되고 진짜는 가짜로, 가짜는 진짜로 보이는 역기능이 나타나 권위주의나 독재가 민주주의로 둔갑될 수 있음.

### 나. R. Dahl 민주주의 최소강령적 정의

-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보통선거, 공무담임권, 표현의 자유, 대안적 정보에 대한 접근, 결사의 자유

## 다. 민주정치의 원리

### 1) 국민주권의 원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 2) 국민자치의 원리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로 그 방식을 나눌 수 있는데, 간접 민주 정치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하게 하는 방법이고, 직접 민주 정치란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제도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도입하는 혼합 민주 정치를 택하고 있다.

### 3) 입헌주의의 원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 4)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93-22]

## 라. 의사결정 : 다수결의 원리 [1993-24] [2007-10]

- 대의제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이다. [2007-10]

- 민주주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통합해 가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구성원간의 다양한 의견이나 이해 관계의 대립을 조정·통합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통일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01-12]



-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 국민의 결정을 국민 전체의 합의로 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여기어 복종함을 의미한다. [2001-12]

### 1) 전제조건 [2001-12]

-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 성원의 평등성 [1996-18]: 즉 구성원들은 동등한 인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성원의 자율성 [1996-18]: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유 의사에 의해 토론과 결정을 하게 된다.
- 의견의 상대성 [1996-18]: 즉 어떤 가치에 대하여 어느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
- 또한 다수의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문제점 [1998-7] [공사 2003-14]

-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는 등 포퓰리즘(populism)이 정치의 지배적 현상이 될 경우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나 중우정치로 전락하고 만다. [2001-12] [2008-8]

## 마. 민주 정치의 이념

### 1)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 정치의 근본이념이다. [1993-22]

### 2) 자유 [1993-22] [2003-9]

- 국가로부터의 자유 [2006-9] : 18세기 시민혁명기에 등장, 자유권과 관련 [2003-9] →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만으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자유의 개념이 발전하며 평등 개념도 같이 도입되었다.
- 국가에의 자유 : 19세기 차티스트 운동기에 등장, 참정권과 관련
- 국가에 의한 자유 : 20세기 복지 국가에 등장, 사회권과 관련

### 3) 평등 [1993-22] [2003-9]

- 형식적·절대적 평등 :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평균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는 배분적 정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 불일치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18세기에 형성되어 그 당시에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자유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게 된, 자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 시대에는 기술 사회의 점증하는 복잡성의 결과로 국가에 의한 자유권 억압에서의 해방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억압을 불러오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구체적으로, 시민 대다수를 위한 자유는 경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통제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자유의 사상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경제 분야였다. 이러한 또 다른 억압은 경제적 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산업화 및 자본의 거대화 등등)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2003-9]

## 바. 민주주의의 유형

-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국민 자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직접, 간접, 혼합 민주주의

유형이 나타난다.

### 1) 직접 민주주의

- ex) 고대 아테네

### 2) 간접 민주주의(대의제) [공사 2004-12] [2024-A-8]

#### 가) 문제점 [1998-7] [공사 2003-14]

##### (1) 정치제도 측면 : 행정국가화 현상 [2007-10]

- 의회가 정부에 비해 무기력하다. [공사 2003-14]

##### (2) 정치의식 측면 : 정치적 무관심 [2007-10] [2009-1차-13]

- D. Riesman : 전통적 무관심(정치에 대한 무지와 통치자에 대한 복종), 현대적 무관심(정치를 잘 알지만 의식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사적 영역으로 도피)으로 구분했다.

- H. Lasswell : 탈정치적 태도(환멸을 느껴 정치에서 물러남), 무정치적 태도(권력 외의 다른 가치에 열중), 반정치적 태도(정치과정에 자체에 반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1999추가-8]

- 정치적 무관심은 아노미와 소외 현상의 발생, 소비를 조장시키는 대중 문화의 발달, 정치 과정의 거대화와 복잡화에 의하여 조장된다. [1992-28]

[공사 2003-14]

오늘날 시민들은 사적인 생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거에서의 투표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칠 뿐이다.

[2009-1차-13]

도시의 폭격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자, 곧이어 뽀뽀스럼계도 비누와 술의 광고가 뒤따른다. ... (중략) ... 어느 여배우의 아침 식사 버릇을 마치 중대한 과학적 또는 예술적인 사건을 보도할 때처럼 비중 있게 보도한다. 이리하여 우리들이 품는 감정과 비판적인 판단은 방해를 받게 되며 마침내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아무런 활기도 찾아볼 수 없는 무관심한 성질의 것이 된다. 자유라는 이름하에서의 생활은 일체의 구조를 상실하게 된다. 즉 그 생활은 수없이 많은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서로 분리되어 전체로서의 감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 프롬(E. Fromm), 『자유로부터의 도피』 -

그들은 정치에 대해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급진적인 것도 자유주의적인 것도 아니며 또한 보수주의적인 것도 반동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비활동적인 것이다. 만일 '바보(idiot)'라는 그리스어의 뜻을 '사생활에 치우친 인간(privatized man)'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 시민은 지금 그와 같은 바보로 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밀스(C. W. Mills), 『화이트 칼라』 -

##### (3)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표하지 못한다. [공사 2003-14]

[공사 2003-14]

대의민주주의가 전제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관념일 뿐이고, 실제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은 그 수가 매우 적다. 형식적인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별로 가치가 없다.

#### 나) 문제점 해결 방안 [1998-7]

- 행정국가화 현상 대처 : 의회의 전문성 제고

- 직접 민주정치 요소 도입

[1998-7]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 국민 대표기관이 입법활동을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원리를 의회주의라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의회가 통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 형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넘어 오면서, 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의회주의 정치 원리가 점점 그 빛을 잃

어 가는, 이른바 의회주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3) 혼합 민주주의

- 앞서 나타난 대의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도입하게 된다.
-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일부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혹은 전부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직접 통치라는 관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2020-A-8] [2024-A-8]
- **국민소환**이란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의 투표로 임기 중 그 직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2024-A-8]

[2024-A-8]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대중에 의한 지배를 일컫는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였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인구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현대의 많은 국가에서 실행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성의 개념이 도입되어 (㉠)(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절대 군주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은/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 사.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 1) 시민

-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란 노예, 여성, 아동을 제외한 아테네 내에서 세금을 내는 성인 남성이다. [2020-A-8]

### 2) 제도 [1998-4]

-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공직을 맡아, 시민(demos)의 지배(kratia)라는 민주주의의 의미 그대로 시민의 **직접 통치**를 실현하였다. [2020-A-8]
-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민회(Ecclesia)를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demos) 전체로 구성하고,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2011-2차-2] [2009-1차-18] [2020-A-8]
- 민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결정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았던 500인 평의회(Boule)를 **추첨**으로 충원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중임 횟수는 제한되었다. [2008-8] [2020-A-8]
- 500인 평의회를 지도하는 50인 위원회는 500인 평의회가 **윤번제**로 1년 임기의 10분의 1씩 맡았다. [2020-A-8]
- **도편추방제**를 실시하였지만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2008-8] [2011-2차-2]
- 장군은 선거로 선출하였다.

### 3) 기타 특징

- 토론이 공공제도를 운영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2009-1차-18]
- 자유와 준법정신이 공적 활동의 전제조건이었다. [2009-1차-18]
- 개인으로서가 아닌 폴리스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존중하였다. [2009-1차-18]
- 재산상의 이유로 공공 생활에서 배제되는 시민이 없도록 배려했다. [2009-1차-18]

[2008-8]

“민주화의 과정에서 독재자가 사라지면 대중 지배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경우 대중의 지배는 점차 선동적으로 변해갑니다. 포퓰리즘(populism)이 지배적인 정치적 현상이 되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의 형태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8-8]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치의 나쁜 점을 거리낌 없이 폭로하고 특히 관리 선출 방식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아들의 마술(馬術) 선생을 정하려는 아버지도 가능한 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데, 하물며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관리를 추첨으로 뽑고도 태연한 것은 우스운 일이다.”

[2008-8]

마라톤의 승리 2년 뒤에 민중이 쫓겨하여 처음으로 ‘도편추방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해 테레시노스 아르콘(참주) 때에는 데모스 사람들에 의해 예비 선출된 500명 중에서 각 부족별로 9명의 아르콘이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참주제 실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이전에는 제한된 계층만이 아르콘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2009-1차-18]

우리의 정치체제는 민주정치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까닭은 정치를 소수의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골고루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출신 계급보다는 개인 능력을 고려하여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이름도 없이 헛되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공직에 종사하고 활기차게 일상생활에 힘씁니다.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 감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중략)... 사적인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치 않으며,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혹시라도 법에 어긋날까 두려워 합니다. 언제나 법과 판사를 존중하며, 특히 학대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불문율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중략)... 우리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아테네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테네인은 직접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올바른 토론에 회부합니다. 가장 나쁜 일은 결과를 올바로 토의하기도 전에 저돌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 루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2011-2차-2]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demos(인민)와 kratos(지배)가 합성된 것으로 ‘인민의 지배’를 뜻한다.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테네의 민회에서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였고, 민회를 운영하는 평의회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직을 ‘추첨’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독특한 정치제도를 운영했던 고대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문명을 만들어 냈다. 그렇지만 아테네의 민주정은 파벌싸움을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다수파가 자신들의 분파이익을 추구하고자 소수파나 정적들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소란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 5. 정부형태 [2023-B-11]

- 정치권력의 기능적 배분에 따른 분류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1999추가-9]

### 가. 대통령제

#### 1) 특징

-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조직된 민주주의 정부 형태이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정부의 세 가지 기능(입법/행정/사법)을 각각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2022-A-8]
- 의회와 독립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담당한다. [1993-16] [2013-2차-2] → 국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가 **이원화**되어 있다. [2009-1차-19] [2013-2차-2]
-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상호간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탄핵은 예외
- 대통령은 내각을 임명하고 통할하며,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거부권을 가진다. [2009-1차-19]

#### 2) 분점정부/단점정부

##### 가) 개념

- 분점정부는 의회와 행정부 지배 정당이 다를 때(한국의 여소야대), 단점정부는 의회와 행정부 지배 정당이 같을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2022-A-8]
- 선거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2016-A-11]

##### 나) 분점정부의 장점

-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하도록 한다.

##### 다) 분점정부의 단점

-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 [2013-2차-2] [2016-A-11]
- 입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 [2022-A-8]
-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

[2016-A-11]

갑국의 정부 형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이다.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A당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악화된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보험의 확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은 이 정책에 많은 지지를 보냈고 A당은 집권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듬해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A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다수당이 된 야당은 집권당의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보험의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입법을 저지하였다. 집권 A당이 공약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자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였고 집권 A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 3) 장점 [1997-7]

- 유권자들에게 정부 구성 선택 기회 부여
- 선거에 대한 책임성 확인이 쉬움
- 입법과정에서 의회 독립성 보장

#### 4) 단점 [1997-7]

가) G. O'Donnell 위임민주주의 [2010-1차-18] [2013-2차-2]

- 위임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들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개념화한 것으로,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승리로 통치의 모든 정당성을 위임받았다고 판단한 뒤 입법부나 사법부의 견제를 무시하고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연결망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며 일반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2010-1차-18] → 즉, 수평적 책임성(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은 무시하고 수직적 책임성(선거)에만 관심이 있다. [2010-1차-18]
-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제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적인 권리들과 사회적인 권리들 또한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즉 **절차적 최소요건(선거제도)을 바탕으로** 정치적 시민권, 시민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체제, **요컨대 통합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2010-1차-18]

[2010-1차-18]

오도넬(O'Donnell)에 의하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는 신임투표적(plebiscitary) 성격을 갖고 있다.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 전체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려 한다. 대통령의 주도 하에 정책의 수립과 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 집권 초 대통령의 정책은 사회의 조화로운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환영받지만, 곧 정책집행 과정에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이 대통령 개인에게 돌아가고, 대통령은 집권 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 K. Loewenstein 신 대통령제 [2013-2차-2]

-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헌법적인 조치를 통해 대통령이 국가의 다른 기관들보다 우월한 정치권력을 가져 권력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다) 임기 말 레임덕 [2013-2차-2]

라) J. Linz

(1) 이원적 정통성으로 인한 의회와 행정부간의 갈등 [2022-A-8]

- 이원적 정통성은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A-8] →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입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A-8]
- 따라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에 대통령제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정치 체제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22-A-8]

(2) 대통령 임기 경직성으로 책임성 저하

나. 의원내각제 [1999추가-9]

### 1) 특징

-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융합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다. [2022-A-8]
-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된 집행부의 권위는 의회로부터 나온다. → 국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가 일원화되어 있다. [1999추가-9] [2009-1차-19] [2013-2차-2]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총리의 의회 해산권을 보유하여 서로에게 견제 수단을 보유한다. [1996-21] [1999추가-9] [2009-1차-19] → 선서실시년도가 불안정하다. [1999추가-9]
- 단독 과반정당이 없으면 연립내각을 구성한다. [2009-1차-14]
- 각료와 의원은 겸직할 수 있다. [2009-1차-19]
-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1993-16]

### 2) 수상정부

- 최근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 → 대통령제적 특징을 갖는다.
- 공간적 리더십(당과 정부와 거리두기), 대중주의적 활동, 개인화된 선거운동, 개인적 위임(자신에게 당이나 정부의 권위 위임), 전문가에 의지(내각보다 외부 전문가에)

### 3) 장점

- 책임정치 구현에 적합하다. 책임정당정부 구성이 가능하여 정책 실패시 책임 추궁이 용이하다. 즉 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의회에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 [1999추가-9] [2021-B-6] → 양당제에서는 행정부를 단독으로 구성하므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2021-B-6]
- 대통령제의 입기 경직성이 없다. [1999추가-9]

### 4) 단점

-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총리나 내각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퇴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2021-B-6]
- 다당제 연립정부에서는 책임정치가 어렵고,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1999추가-9] [2016-A-11] [2021-B-6]

[1999추가-9]					
선거 실시년도	집권당	행정수반	선거 실시년도	집권당	행정수반
1960	갑	a	1980	을·병	c
1964	갑	a	1982	갑	f
1966	을	b	1986	갑·병	g
1969	을	c	1990	을	h
1973	갑·정	d	1993	갑	i
1977	을	e	1997	을	j

[2009-1차-19]  
 A 국 '11월 총선설' 과연 진실은?  
 A 국 집권당인 '갑'당 내부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올해 11월로 앞당겨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즘처럼 여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조기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여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갑'당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호기를 놓치지 아까울 것이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 ○○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방부 장관 △△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을'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6-A-11]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을국의 의회에는 다양한 이념을 가진 5개의 정당이 존재한다. 각 정당의 이념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정당	이념
B	우파

C	중도 우파
D	중도파
E	중도 좌파
F	좌파

제1당인 B당은 소수당인 D당과 연합을 하여 집권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환경 정책을 둘러싸고 B당과 D당은 심각하게 대립 중이다. 제1당인 B당 내에서는 집권의 파트너를 중도 우파 성향의 C당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다. 이원정부제

### 1) 특징

- 현대사회에 있어 혼합정체가 실현된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과 의원내각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점을 혼합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행정부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제도다. [2011-1차-15] [2013-2차-2] [2017-A-12] → 행정권을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공유하는 **이원적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1-1차-15]
-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제적 요소) [2013-2차-2], 외치를 담당한다. [2011-1차-15]
-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 내치를 담당하며, 행정부는 **의회의 다수당이 구성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 [2013-2차-2] [2017-A-12]
-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발동시에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94-34]
-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총리는 내각을 임명하는 정치적 권한**을 보유한다. 대통령이 다수당인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당인 여당 의원을 수상으로 임명하면, 야당이 다수인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할 수 있다. [1994-34] [2011-1차-15] [2017-A-12]
- 대통령은 전통적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한 **의회해산권**을 지니지만,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1994-34] [2017-A-12]

### 2) 동거정부

- 의회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이 수상과 각료를 임명할 때 자율성을 누리게 되어서 의회의 견제를 덜 받는 **강력한 대통령제**처럼 운영된다. [2017-A-12]
-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과 의회의 다수파의 지지를 얻은 총리가 속한 정당이 다룰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동거 정부가 성립되었다.**”라고 한다. [2011-1차-15] → 동거정부에서 대통령 권한은 크게 축소되어 **의원내각제처럼 운영된다.** [2017-A-12] 이러한 경우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2013-2차-2]

### 3) 장점

- **이원적 정당성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고, 총리와 대통령의 권력분산으로 독단적 국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 [2013-2차-2]

[2011-1차-15]

최근 국회의장 산하의 헌법개정연구자문단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이원정부제나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러한 정부 형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미국의 정부 형태에서, 그리고 이원정부제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에서 그 원형이 발견된다.

## 라. 우리나라의 특징



-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로 ‘절충식 정부형태’의 면모를 가진다. [2013-2차-2]

### 1) 의원 내각제적 요소 [2013-2차-2]

-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1993-16] [2013-2차-2]
-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1993-16] [2013-2차-2]
-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이 인정되어 있다. [1993-16] [2013-2차-2]
- 행정부 각료와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어 있다.
- 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무회의가 국정을 심의한다.

## 마. 의회 관련 개념

### 1) 구성 방식 : 단원제와 양원제

- 미국 중앙정부의 입법부는 인구 비례 원칙에 기초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의회와 주별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의회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입법부 형태를 양원제라고 한다. [2014-A-기입4]

### 2) N. Polsby 변형능력의 수준에 따른 구분

- 변형능력이란 사회적 요구를 법률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이를 기준으로 전환의회(전환형 의회), 무대의회(경합장형 의회)로 구분하였다.

#### 가) 전환의회(transformative legislation)

- 사회적 문제 혹은 요구를 법률로 전환하기 위한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의회로, 행정부와 별개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입법을 행한다.
- 의회의 중심 활동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을 심도 깊게 토론하고, 이를 법률로 전환함으로써 의회는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한다. [2010-1차-16] → 의회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쉽다. [2010-1차-16]
- 따라서 의회에서 정당의 역할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중심이 된다. → 포크베럴이나 로그롤링과 같은 개별 의원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 쉽다. [2010-1차-16]
- 대통령제와 조율성을 가진다.

#### 나) 무대의회(arena legislation)

- 입법보다는 여야간의 논쟁이 의정활동의 중심이 되는 유형으로, 정치체제 내의 중요한 정치세력들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위한 공식화된 무대 혹은 환경을 제공할 뿐 능동적으로 법안을 성안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다.
- 본회의 토론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본회의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의회는 대표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2010-1차-16]
- 따라서 정당 규율이 엄격하고, 정당정치가 강한 국가에서 보다 빈번히 나타난다. [2010-1차-16]
- 의원내각제와 조율성을 가진다.

### 3) pork-barrel, log-rolling

- 포크베럴 : 이권법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역구의 선심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행태이다.
- 로그롤링 : 답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것이다.

## 바.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 구분

### 1) 단일 국가 혹은 중앙 집권적 형태

- 중앙 정부가 주권을 향유하며, 지방 정부를 통제한다. 지방 정부의 권력은 중앙정부에 위임된 것이며, 위임된 권한은 중앙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2019-A-2]

### 2) 연방제 [2019-A-2]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주권을 공유하거나 나누어 가지며,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 [2014-A-기입4] [2019-A-2]
- 중앙정부와 주정부 모두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014-A-기입4]

### 3) 국가연합 [2019-A-2]

- 국가 연합은 국가 지위를 갖는 국가들이 참여한 형태이거나, 독립성을 가진 각 지방 혹은 지역으로 주권을 귀속시킨 형태이다. [2019-A-2]
- 시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중앙 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단위 간 결속력이 가장 느슨한 탈중앙집권적 국가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국가 수준에서는 드문 예이다. [2019-A-2]

## 6. 선거

### 가. 선거의 원칙

#### 1) 보통 선거 (↔ 제한 선거)

-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1996-27]

#### 2) 평등 선거 [1997-6] [2001-10] [2002-11] [2003-11] (↔ 차등 선거, 불평등 선거)

- 첫째, 선거인의 투표가치가 평등해야 한다. [1997-6] [2016-A-6] [2022-B-5] → 1인 1표의 원칙은 물론, 표의 가치도 평등해야 하며 이때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문제된다. [2001-10] [2016-A-6]
- 둘째, 선거과정에서 선거참여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6-A-6]

[1997-6]						
<자료 1>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지역구 선거 득표율		정당별 의석 수 (의석 비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제 6대 (1963. 11. 26.)	소선거구제	여당	33.5%	88(67.2%)	22(50%)	110(62.9%)
		제1야당	20.1%	27(20.6%)	14(31.8%)	41(23.4%)
		기타	46.4%	16(12.2%)	8(18.2%)	24(13.7%)
		계	100%	131	44	175
제 10대 (1978. 12. 12.)	중선거구제	여당	31.7%	68(44.2%)	77(100%)	145(62.8%)
		제1야당	32.8%	61(39.6%)		61(26.4%)
		기타	35.5%	25(16.2%)		25(10.8%)
		계	100%	154	77	231
제 12대 (1985. 2. 12.)	소선거구제	여당	35.3%	87(47.3%)	61(66.3%)	148(53.6%)
		제1야당	29.3%	50(27.2%)	17(18.5%)	67(24.3%)
		기타	35.4%	47(25.5%)	14(15.2%)	61(22.1%)
		계	100%	184	92	276

[2003-11]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는 1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5.26 : 1, 그리고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5.87 : 1의 비율을 보였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지역선거구간의 지나친 인구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 획정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인구 편차가 4 :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대 선거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3만 1천 458명)와 최소 선거구(경북 고령·성주군, 9만 656명)의 인구 편차가 3.65대 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 규정인 선거법 2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2대 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 편차는 3대 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B-5]

교수 : ‘평등선거’ 개념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학생 : 모든 유권자가 동일하게 1표씩 갖는 것입니다.

교수 : 그렇죠. 그런데 가상의 국가에 갑과 을, 2개의 선거구가 있고 각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며 모든 유권자가 동일하게 1표씩 갖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의 유권자가 100명이고 을의 유권자가 1,000명이면 갑의 유권자 1명은 을의 유권자 1명의 10배에 상응하는 표를 가진 셈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평등선거’ 개념의 속성에는 투표가치의 평등도 있습니다.

#### 3) 직접 선거 [2002-11] (↔ 간접 선거)

-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 4) 비밀 선거 (↔ 공개 선거)

-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 5) 1인 1표제의 문제점

-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중략) ... 비례 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 작성 방법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2002-11] [2008-7]
-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그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출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돼 정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에 비해 투표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평등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2002-11] [2008-7]

## 나.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의 역할

### 1) E. Burke 대표(신탁) 모델 / 대표 모형 [2019-A-1]

- 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신탁자이며,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2009-2차-3] [2013-1차-19]
- 대표는 지역구민의 의견을 단순히 반영해서는 안 되며, 편중되지 않은 성숙한 판단력, 계몽된 양심으로 공적 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러한 독자적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임기가 끝난 후 선거를 통해 물어야 한다. [2009-2차-3] [2019-A-1]
- 반면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지역구의 이익을 등한시할 수 있다. [2009-2차-3]

[공사 2004-12]

의회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에서 파견된 대사들의 회담장이 아니다. 의회는 전체로서의 국민의 이해를 가지는 국민의 심의기관이다. 의회에서는 지방의 목적과 편견이 아닌 전체의 일반이성에서 나오는 일반적 복지까지 향되어야 한다. - 버크(E. Burke)

[2009-2차-3]

대표가 선거인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헌법의 목적은 사회의 공공선을 분별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덕목을 갖춘 사람을 통치자(대표)로 얻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그(대표)가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고자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주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가능한 한 최상의 지혜와 덕목을 갖춘 대표가 정치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들은 대표를 선거인들의 수탁자(trustee)로 보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3-1차-19]

여러분, 의원으로 선출되어 지역구민들과 하나가 되고, 긴밀한 접촉을 하고, 제한 없는 교류를 하며 살게 된 것은 분명히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중략)..... 통치와 입법은 이성과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성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하기 이전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심사숙고하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이 다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논쟁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300마일 떨어져 있다면, 그 곳에서 어떻게 이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중략)..... 의원은 지역구민들의 견해를 기쁜 마음으로 청취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른 분명한 확신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고 투표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 권위적인 지시와 요구 사항들은 이 나라 법체계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버크(E. Burke) -

### 2) 대리인 모델 / 위임모형

- 대표는 선거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구민의 정책 선호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2009-2차-3] [2013-1차-19] [2019-A-1]
- 임기 중이라도 대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임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2013-1차-19] [2019-A-1]
- 반면 포퓰리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09-2차-3]

[2009-2차-3]

대표가 선거인과 닮아야 한다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대리하고 있는 사람들과 최대한 닮아야 한다.” “대표는 선거인들의 처지와 필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야 한다.” 이 주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선거인들을 닮은 대표가 선거인들의 정치의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들은 대표를 선거인들의 대리인(delegate)으로 보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다. 선거구 획정의 원칙

- 우리 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선거구간 인구의 균형·사회적·지리적·역사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법률로써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1-10] → **게리맨더링 금지** [1993-15] [2001-10]

[2001-10]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 과정에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 정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 선거 제도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가능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조작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 라. 선거 제도의 구성 요소

- 주요 요소는 선거구의 크기, 의석 할당 방식, 투표 방식, 진입 장벽 등이 있다. [2025-A-11]

## 마. 선거구의 종류와 대표 결정 방식

### 1) 소선거구제 [2017-B-2] [2020-B-6] [2023-B-6] [2025-A-11]

#### 가) 개념 [2012-1차-15]

-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2025-A-11]

#### 나) 대표선출제도

##### (1) 상대 다수 대표제 : (단순) 다수 대표제 [공사 2005-23] [2017-B-2] [2025-A-11]

-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2018-B-6] [2014-B-논술1] [2025-A-11]
- 당선자 결정이 용이하다. [공사 2005-23]
-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 [2014-B-논술1] [2018-B-6]

##### (2) 절대 다수 대표제 [2018-B-6] :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2021-A-7]

-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당선된다. [2018-B-6]
- 결선투표제 [2021-A-7] : 1차 투표 결과, 최대 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021-A-7]
- 선호투표제 [2021-A-7] : 투표자가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전부 기입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소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최소 득표자의 차순위 선호에 따라 표를 이양시킨다. [2021-A-7]
-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와 비교하여 한 번의 투표만 필요하므로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개인의 선호를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 [2021-A-7]
- 당선자의 대표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2021-A-7]
-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다) 단점

- 평등선거 원칙과 관련하여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문제되기도 한다. [2001-10] [2016-A-6]
- 다수대표제는 당선자 이외의 득표는 모두 사표 처리되므로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2018-B-6] [2021-A-7] [2022-B-6] → 비례성이 떨어진다. [2020-B-6] [2025-A-11]
- 소수 집단이 지지하는 정당이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22-B-6]
-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 **과대 대표** 혹은 **과소 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1-1차-19] [2012-1차-15] [2018-B-6] →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2022-B-6]

## 2) 중·대선거구제 [2017-B-2] [2020-B-6] [2023-B-6]

### 가) 개념 [2012-1차-15]

- 한 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2019-B-6] [2023-B-6]

### 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소수대표제) [공사 2005-23] [2009-1차-14] [2017-B-2] [2025-A-11]

#### (1) 개념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2014-B-논술1] [2022-B-6] [2025-A-11]
-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곱한 자연수를 우선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아래가 큰 순으로 배분하는 최대잉여법(헤어-니마이어식)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 (2) 방식

- 구속 명부식(폐쇄형) [2022-B-6] [2025-A-11]: 유권자들이 정당만 선택하고, 정당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2022-B-6]
- 비구속 명부식(개방형) [2022-B-6]: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명부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그 정당의 득표로 계산되는 동시에 그 후보의 순위를 정한다. [2022-B-6]
- 비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 대한 선호표시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개개 후보에 대한 선호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22-B-6]

#### (3) 봉쇄조항

-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례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일정 득표율 이하의 정당에게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9-B-6]

#### (4) 장점 [공사 2005-23] [2023-B-6]

-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2019-B-6] [2014-B-논술1] [2025-A-11]
-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2009-1차-14] [2011-1차-19]
-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 용이하다.

#### (5) 단점

-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에서 결정한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음.

### 다) 장점 [공사 2005-23]

- 사표가 감소하여 득표율과 의석간 불일치 현상이 완화된다. [1999-8] [2025-A-11]
-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음

### 라) 단점

-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어려움
-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 발생

### 3) M. Duverger 뒤베르제의 법칙

- 선거제도는 정당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B-6]
-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는 양당제를 출현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1-1차-18] [2018-B-6] → 그 이유는 첫째, **군소정당 후보자의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기계적 효과**(제도적인 측면), 둘째, **유권자가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사표 방지) 심리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2018-B-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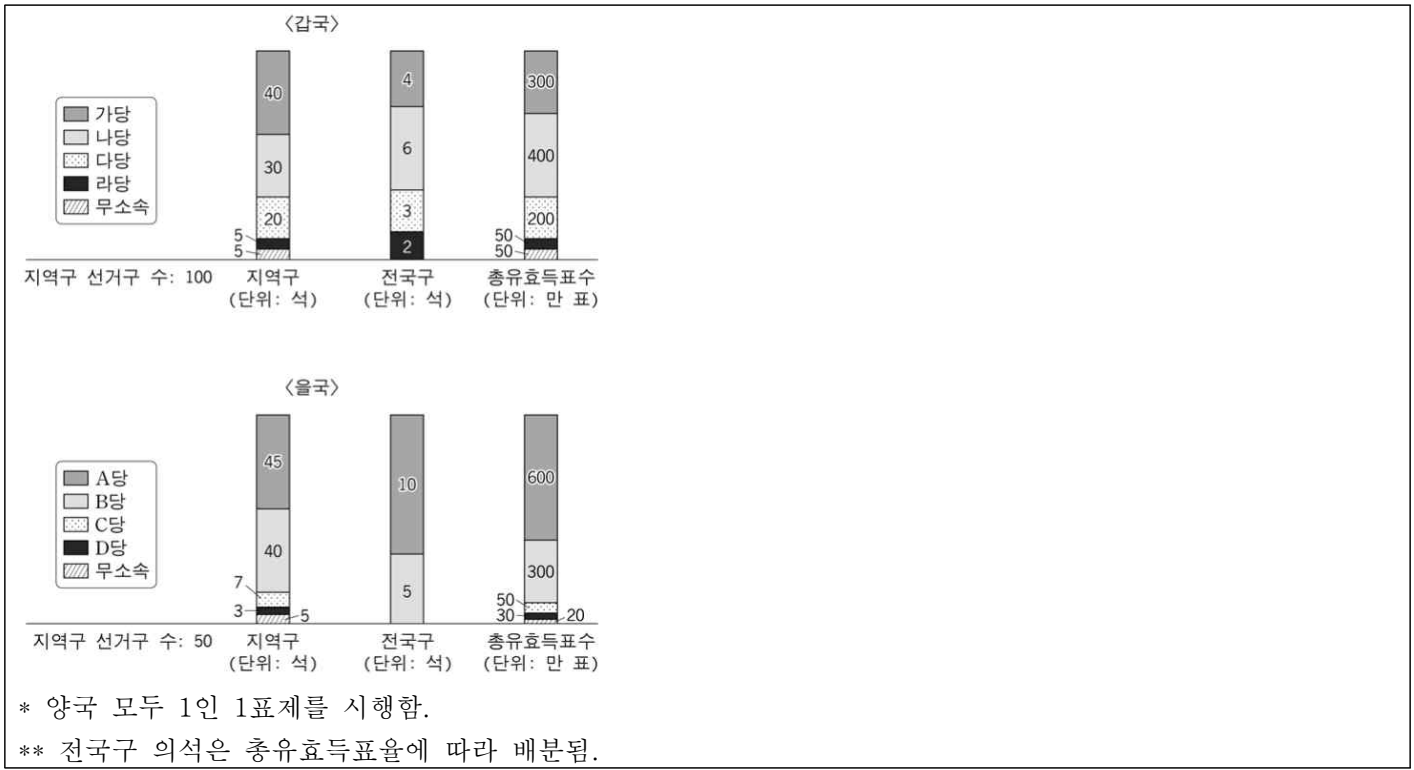
[1999-8]				
구분		갑 정당	을 정당	병 정당
선거구	A-1	23	18	20
	A-2	24	21	14
	B-1	5	29	14
	B-2	23	20	19
총 득표수		75	88	67
득표율(%)		32.6	38.7	28.7

[1999-8]				
구분		갑 정당	을 정당	병 정당
선거구	A	47	39	34
	B	28	49	33
총 득표수		75	88	67
득표율(%)		32.6	38.7	28.7

[공사 2005-23]									
정당	선거구별 득표율(%)					전체 득표율(%)	다수대표제도에 의한 의석수	비례대표제도에 의한 의석수	
	갑	을	병	정	무				
A	40	40	30	40	50	40	4	2	
B	25	25	50	25	5	26	1	1	
C	35	35	20	35	45	34	0	2	

[2009-1차-14]			
(가)국 : 대통령제			
	A 당	B 당	C 당
지역구 1위 득표자 수	28	12	10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 합계(%)	40	30	30
의석수(지역구 50석+비례대표 20석)	36	18	16
(나)국 : 의원내각제			
	갑 당	을 당	병 당
지역구 1위 득표자 수	25	20	5
소속 지역구 후보 득표 합계(%)	40	30	30
의석수(지역구 100석+비례대표 20석)	38	48	34

[2012-1차-15]
--------------



[2014-B-논술1]

<선거제도와 의회의 민주적 대표성 관련 자료>

(단위 : %)

선거제도	국가	구분	성		소득			이념*			
			남성	여성	고소득	중간소득	저소득	우	중도우	중도좌	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A국	국민	45	55	10	30	60	20	30	30	20
		의원	90	10	60	20	20	0	55	45	0
	B국	국민	50	50	5	45	50	20	30	30	20
		의원	70	30	70	30	0	5	45	50	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A국	국민	50	50	10	40	50	20	30	30	20
		의원	50	50	10	45	45	20	30	30	20
	B국	국민	45	55	5	50	45	15	35	35	15
		의원	45	55	5	55	40	15	35	35	15

\* 의원의 경우 소속정당의 이념을 나타내며, 모든 사례에서 각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은 한 개만 존재함.

[2017-B-2]

갑국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각 주별로 최소 2명 이상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된 수를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최다 득표를 한 정당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 제도는 현재 14개 주로 구성된 갑국이 연방제를 채택할 당시 각 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당 제도가 확립된 갑국에서 최근에 실시된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상 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각 주별로 실시하는 선거인단 선거를 실시하되, 각 당이 해당 주에서 득표한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둘째 방안으로 각 주의 지역구를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만큼 나누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따라서 현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갑국의 헌법에는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를 선거인단이 선출한다는 대통령 선출 방식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365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은 대통령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2018-B-6]

국가는 투표에서의 특정한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이 공직을 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칙을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나 규칙을 선거제도라고 한다. 현재 민주국가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선거제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이다.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을 간의 비례성이 1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비례 대표제에 비해 과잉 대표나 과소 대표 현상이 더 일어나게 된다.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의 경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 가능성이 높고 하는데, 이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선거구 절대 다수 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는 정당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뒤베르제(M. Duverger)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는 양당제를 출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군소정당 후보자의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기계적 효과, 둘째, 유권자가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심리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 바.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 제도

- 유권자에게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 비례 대표에 대하여 각각의 독립적 투표권을 부여한다. [2011-1차-19] →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를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의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왔던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분할 투표에 힘입어 군소 정당의 후보자도 국회에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2011-1차-19]
- 현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이며, 245명은 지역구에서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로, 그리고 54명은 전국을 단위로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2011-1차-19] [2020-B-6] → 1인 2표제에 근거한 혼합 선거제도의 한 유형이다. [2011-1차-19]
- 현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이며, 245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그리고 54명은 정당 비례 대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2011-1차-19]
- 정당 비례 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자 추천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11-1차-19] → 여성의 의석 비율을 증가 시킴으로써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졌다. [2011-1차-19]
-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유지되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비례성이 낮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1-1차-19] [2020-B-6]
- 21대 총선에는 30석에 대하여 연동률 50%의 캡을 설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 기초의원들은 중선거구 다수대표, 광역의원들은 소선거구 다수대표 [2025-A-11]
- 우리나라 비례대표 봉쇄조항은 정당득표율 3% 혹은 지역구 5석

### 사. 정당공천제

#### 1) 후보자 추천의 방향에 따라 : 하향식, 상향식, 혼합식 [2012-1차-13]

- **하향식 공천** [2003-7] : 전략공천 →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후보를 낼 수 있지만 **비민주적**이다. [2003-7]
- **상향식 공천** : 당원과 국민이 후보자를 선출한다. → 민주적이다.
- **혼합식 공천** : 위 두 방법의 절충
- 폐쇄형 정당구조일수록 하향식, 개방형 정당구조일수록 상향식 공천.

[2003-7]

정당명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당	당무위원회 심사·의결 → 총재 추천
△△당	당무회의 심의 → 총재단 회의의 협의 → 총재 결정

[2012-1차-13]

A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도덕성, 당 기여도, 당선 가능성, 정책 수립 능력

과 추진 능력을 기준으로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 내외에서 이 공천 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유권자 10,000명이 각 공천 신청자에게 투표한 결과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후보를 결정하였다.

## 2) 지방자치제에서의 공천제도 [2012-1차-18]

- 정당이 모든 지방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각 후보들이 정당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2012-1차-18]
- 장점 : 지방 자치 단체장 후보가 줄어든다. [2012-1차-18] → 유권자가 후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단점 : 지방 의원에 대한 소속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 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 자치 단체 운영이 경색될 수 있다. [2012-1차-18]

## 3) 공천방식?

- 당원투표 : 이념적 정체성, 민주성, 당원지위 향상
- 여론조사 : 역선택 문제, 정당이념이나 당원지위 약화, 대표자 배출 기능이나 정치사회화 기능은 강화

## 아. 합리적 투표자 이론

### 가) 개념 [2013-1차-16] [2016-B-6]

- 합리적 투표자 :  $V = PB - C + D > 0$
- $V$  = 투표 기대효율
- $P$  = 선거결과를 바꿀 확률 [2016-B-6]
- $B$  = 선택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얻을 혜택
- $C$  =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 $D$  = 시민의 의무

### 나) 투표의 역설

-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한 표의 가치는 떨어진다. [2013-1차-16] [2016-B-6]
- 콩도르세 역설 : 민주적 선거제도가 합리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더라도 투표하는 이유

- 시민의 의무 [2013-1차-16]
- 정당선호를 표현 [2013-1차-16] [2016-B-6]
- 정당이 제공할 편익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 [2013-1차-16]

[2013-1차-16]

작은 위원회나 혹은 마을 회의에서라면, 특히 가부를 묻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대통령 선출에 5,000만 명이 투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 전국적 선거에서 한 사람의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내가 투표한다면 내 표의 가치는 올라가겠지. 이처럼 자신의 표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 역설적으로 내 한 표의 가치를 잃게 되겠지. 결국 투표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

## 7. 정책과정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대중매체

### 가. 정당의 의의

- 공직 후보자를 공천한다. [1993-12]
-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의 주요 정책 대안으로 전환시키는 이익집약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1-1차-18]

### 나. 정당의 유형

#### 1) 간부정당 / 엘리트 정당

- 19세기 의회 내 파벌과 명망가들이 공통의 의제를 입법화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정당 조직 유형이다. [2019-A-9]
- 이후 대중정당으로 변신한다.

#### 2) M. Duverger 대중정당(mass party) / 대중통합정당(mass-integration party) [2019-A-9]

- 대표 양식은 '대리' 개념에 가깝다. [2010-1차-14]
-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며, 재원의 당비 의존도가 높아진다. [2010-1차-14] [2019-A-9]
- 의회 외적 기원을 갖는 것으로 듀베르제(M. Duverger)가 대중정당으로 명명한 정당 조직 유형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창당된 것이다. [2019-A-9] → 계급적 구분과 분파적 구조가 뚜렷했던 시기에 발달하였고,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포괄정당으로 변형되었다. [2005-7] [2019-A-9]
- 중앙당과 지부 관계는 중앙집권적이며, 규율이 엄격하다.

#### 3) O. Kirchheimer 포괄정당(catch-all party) [2005-7] [2019-A-9]

- 균열구조가 약화되면서 등장하였다. [2005-7] [2019-A-9] →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중요성이 약화된다. [2010-1차-14]
- 대표 양식은 '위임' 개념에 가깝다. [2010-1차-14]
- 1950년대 이후 선거 승리와 대중 매체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등장하여, 이념보다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이슈를 제기한다. [2019-A-9] → 시민사회의 이익 반영보다 시민사회와 국가 정책의 연계를 중시한다. [2010-1차-14]
- 정당 재원 측면에서 정치후원금이나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2019-A-9]
- A. Panebianco 선거 전문가 정당 : 당 관료보다 전문가들이 중심 역할을 한다.

[2005-7]

○○당은 이제 구태를 벗고 국가경영의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난다. ...(중략)...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열망하는 국민과 더불어 21세기 선진한국과 한반도 시대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2010-1차-1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당, 특히 독일 정당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이 유형의 정당이 등장한 것은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로 나타난 교육 수준의 향상, 개인주의의 강화, 경제 성장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정 이념이나 계급·계층에 의존하기보다 광범위한 유권자의 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 4) 카르텔 정당

- 새로운 정당의 의회진입을 저지해서 기존 정당이 대표성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려는 정당 유형이다.

## 다. 정당체제

### 1) M. Duverger : 정당의 수에 따라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 가) 일당제

#### 나) 양당제

-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1992-36] [1999추가-9] [2000-10]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1992-36] [1999추가-9]
-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1999추가-9]

#### 다) 다당제 [1999추가-9] [2014-A-기입2]

##### (1) 장점

-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1992-36] [2000-10] [2015-B-논술1]
-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 라) 대표선출제도와 정당체제의 관계 [1999-8]

- 다수대표제는 양당제 강화
-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출현, 양당제 어려움
- 결선투표제는 다당제 형성, 연합하는 경향

### 2) G. Sartori : 정당의 수, 정당의 상대적 규모, 경쟁의 보장유무 등 고려

정당경쟁성	이데올로기 거리(분극성)	정당체제 유형
비경쟁체제	일극체제	일당제 패권정당제
경쟁체제	양극체제	일당우위제 양당체제
	다극체제	온건다당제 분극적 다당제 원자적 다당제

#### 가) 비경쟁체제

##### (1) 일극체제 : 일당제

- 권위주의 독재국가

##### (2) 일극체제 : 패권정당제 [2011-1차-18]

- 비자유선거, 정권교체 없이 한 정당이 계속 집권

#### 나) 경쟁체제

##### (1) 양극체제 : 일당우위제

- 정당 간의 정권 획득을 위한 자유 경쟁이 보장되어 있으나, 정권 교체 없이 어느 하나의 정당이 지속적으로 집권을 하는 경우. [2011-1차-18]

##### (2) 양극체제 : 양당체제

- 소선거구제
- 각 정당이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정강정책이 비슷하게 수립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11-1차-18] → 포괄정당?

##### (3) 다극체제 : 온건다당제, 분극적 다당제, 원자적 다당제

- 비례대표제
- 연립을 통해서 집권한다. [2011-1차-18]

### 3) 유효정당 [2012-1차-15] [2014-A-기입2]

- 정당체제 유형 분류에는 단순히 존재하는 정당 수가 아니라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효정당이 중요하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정당지수 = 1 / 각 정당의 의석률 제곱의 합. [2014-A-기입2]
- 1.5 미만이면 일당제, 1.5~2.5 미만이면 양당제, 2.5~ 다당제. [2014-A-기입2]

### 라. S. M. Lipset & S. Rokkan : 정당체계의 지속과 변화

- 사회는 이념, 지역, 계층 등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균열은 급속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체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2015-B-논술1]
- 기존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균열구조가 동결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 환경, 반핵, 참여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균열이 등장하였다. [2015-B-논술1]
-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나 지역적 균열구조가 강조되고 있다. [2011-1차-18] [2023-B-6]

[2015-B-논술1]

(가) 한 국가의 정당체제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의회에서 정당 간 세력판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의 정당경쟁구도는 사회에서 대립하던 사회집단들이 정치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동원된 사회적 균열(cleavage)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유럽의 경우 종교개혁이나 국가혁명 혹은 산업혁명 등을 계기로 정당체제의 정렬(alignment)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A 국가의 경우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 계층이 주요 지지기반인 사회민주당과 가톨릭 신도가 주요 지지기반인 기독교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죠. 그러나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1980년대 이후 환경, 반핵, 참여 등을 내세운 녹색당이 의회에 진입하면서 다당제적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마. 이익집단의 발생 배경

-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의 요구와 증대 [1992-37]
- 정당의 기능 저하 (대표 원리의 약화 [1992-37])

### 바. 이익집단의 형성

#### 1) 자연발생: 파도이론, 확산이론 [공사 2007-13]

- 집단 성원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다.

#### 2) M.Olson 합리적 선택이론: 무임승차 [공사 2007-13]

- 공동의 이해관계는 공공재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가입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 가입,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공사 2007-13]

사.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활동 목표와 기능 [공사 2002-15] [2002-9] [2004-8] [2024-A-8]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권 획득 [2024-A-8]	사익	공익
여론 수렴	여론 투입	여론 투입

[공사 2002-15]  
 가) 2000년 10월 ◇◇ 노동조합 총연맹이 개최한 ‘2000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에서 조합원들은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임금, 승진 차별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정부 요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나) 정부는 1985년 ○○호를 담수호로 만들어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 개발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이 계획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상 시위 등을 주도하였다.

[2002-9]  
 정부는 한강 유역 홍수 조절과 물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을 댐 건설 예정지로 고시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 그리고 정당들은 자연 생태계 훼손과 댐 건설 안전성의 문제 등을 들어 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2004-8]  
 ‘△△연합’은 배달민족의 유일한 삶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합’ 단체 소개 중에서)  
 ‘□□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변형된 민주 복지사회의 건설 및 참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강력한 정치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역량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노총’ 선언 중에서)

[2024-A-8]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 ㉡이익 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민 단체 역시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한 집단이다. 언론은 정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아. 정책결정과정: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1) J. Madison, R.Dahl 다원주의/다두제(polyarchy) [1994-24] [2005-13] [2022-A-7]

가) 기본 가정

- ① 정치를 모든 집단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는 집단적 협상 절차(정치권력이 사회 집단에 균등하게 배분됨)로 간주한다. [1996-16] [2005-13] [2011-1차-14] [2012-2차-2] [2013-1차-17] [2017-A-4] [2022-A-7] →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22-A-7]
- ② 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2005-13] [2017-A-4]
- ③ 국가는 중립적이다 : 수동적으로 이익집단만의 압력을 받기만 하며, 다른 파벌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파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자유롭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그친다. [1994-24] [2005-13] [2011-1차-14] [2013-1차-17] [2022-A-7] → 선거, 정당, 정치적 자유 필요

나) 비판

- 현실에서 집단이 보유한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반박을 받는다. [2017-A-4]
- 토의민주주의 입장에서 비판 [2012-2차-2] → 선호전환이 아니라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이며 불평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 조직의 복잡성과 이익의 다원성이 시민의 양심을 해칠 우려가 있다.
- 이익집단 영향력이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1996-16]

민주주의란 일반 시민이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이다.

[2005-13]

다원주의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익집단들이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수많은 자율적 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이익을 표출하는 집단 간 경쟁구조를 이루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권력의 평형상태를 지향한다.

[2011-1차-14]

미국 연방 구성 당시,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들이 각각 정치적 의견을 갖지 않을 경우에 정치적 안정과 질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매디슨(J. Madison)의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목적이란 어떤 한 파벌(faction)이 다른 파벌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파벌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자유롭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파벌이 민주적 결사체들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적 안정의 구조적 차원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경쟁적 이해관계의 존재란 민주적 균형의 기초이며, 공공정책을 바람직스럽게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2012-2차-2]

이익집단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공공 정책의 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이익집단의 경쟁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정부의 반응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공공 정책은 상이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간의 협상과 흥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고 중재하는 공정한 심판자이다. 달(R. Dahl)은 **다두제(polyarchy)**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정치권력의 폭 넓은 분산과 균형을 가져왔음을 해명한 바 있다.

[2017-A-4]

이 관점은 분화된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이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정치 과정에서 대체로 균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사회 내의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정치 과정에 경쟁과 협상이라는 시장 원리를 적용하고, 절차상으로 그 과정에 모든 집단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모든 집단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는 집단적 협상 절차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현실에서 집단이 보유한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반박을 받는다.

## 2) P. C. Schmitter 조합주의(Corporatism) [2005-13]

### 가) 기본입장

- 조합주의는 이익집단 간 갈등, 정부와 이익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대두되었으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이익집단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책을 형성한다.** [2005-13] [2011-1차-14] [2013-1차-17]
- 조합주의는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으로 조직된 한정된 수의 이익집단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에 따라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체계이다. [2005-13]
- 이들 조직들은 국가에 의해 (만약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고, 허가되며,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와 지지를 표명함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들 각각의 범주에서 **독점적인 논의대표권을 부여받는다.** [2005-13]
-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이익집단이 정부가 이익을 보장해 준 대가로 정부에 순응**하기도 한다. [2013-1차-17]
- 이익집단 지도자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3-1차-17]
- 이익의 억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
- 장점으로는 사회적 이익의 배분이나 조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제도

### 나) 국가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 [2013-1차-17]

- 거시(국가 차원), 중간(산업별), 미시(기업차원) 조합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다) 무계중심의 이동 [2013-1차-17]

- 이익대표구조의 조직적 특성(코포라티즘)에서 정책 형성과정(직업교육, 고용확대, 소득보전 등)에 공급 측면 코포라티즘으로 위계적 성격이 약화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2013-1차-17]

## 자. 정치참여의 형태 [1995-52] [1995-53]

### 1) 인습적 / 비인습적

- 사회의 법이나 관습에서 허용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 2) 자발적 / 비자발적

- 정치과정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기준으로 분류

## 차. 대중매체

### 1) 의미

- '제4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2007-11]

### 2) 장점

- 의제설정, 여론형성 기능

### 3) 단점

- 대량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반복하여 전달하여, 일방적 전달로 인한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2007-11]

- 영리를 위해 더 많은 독자나 시청자·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업성으로 인하여, 질적으로 낮은 정보를 유통할 수 있다. [2007-11]



## 8. 국제정치

### 가. 국제연합

#### 1)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한다. [2014-A-기입3] [2024-A-9]
- 총회 의결은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진다.

[2014-A-기입3]

국제연합(UN)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인권 존중, 그리고 국가 간 우호적 협력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 구성과 활동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총회'에서는 이 원칙에 의거해 개별 회원국들이 각각 1표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2)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으로,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절차 사항인 안건은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실질 사항인 안건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A-9]
- 인도적 개입이 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4-A-9]

[2024-A-9]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으며, 때때로 자국의 국민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집단학살을 자행하기도 한다.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살로 인하여 80~100여만명이 희생되었으며, 2003년에 시작된 수단 다르푸르 학살로 20~30여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되는 집단학살 등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는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인도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보호책임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인도적 개입이 지닌 목적의 정당성은 국제 사회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는 도덕적인 근거로 지지를 받았지만,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 헌장에 보장된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실행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인도적 개입이 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집단학살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 3) 국제 사법 재판소

-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구이지만,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해야만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판결에 따르는 제재수단이 없다.

#### 4) 한계

- 회원국들의 부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여 의사결정 지연
- 총회의 권고안이 현실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대한 집행력이 약해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에 한계를 보임 → 주권 평등의 원칙에 의한 문제점 [2014-A-기입3]

[2014-A-기입3]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은 관련 국가의 동의 없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을 주저해 왔다. 그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나. 국제 관계의 변천

### 1) 냉전 체제와 탈냉전 체제

-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으나, 제3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다극체제**로 전환되며 냉전체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몰타 선언과 사회주의 진영 붕괴로 인하여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에 돌입하였다. [2004-5]

[2004-5]

(가) 옛 소련 요격기 조종사 오시포비치는 1983년의 KAL기 폭파사건 이후 20년만의 인터뷰에서 “공중에서 KAL 007기를 계속 추적하는 과정이었고, ... 관제소로부터 두 번째로 ‘격추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그 순간, 나는 ... 미사일을 발사했다. ...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본 뒤 ... ‘목표물 격추, 임무 완수’라고 지상관제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나) 2003년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 차관 상환협상이 지난 9월 타결된 데 대해 고맙다는 뜻을 표시했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한, 러시아 3국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2-1차-16]

A	⇒	B	⇒	C	⇒	D
냉전기 (1950~60년대)		긴장 완화기 (1970년대)		신냉전기 (1980년대 초)		탈냉전기 (1980년대 말 이후)

## 다. 국제 사회의 행위주체

### 1) 국가

### 2) 초국가적 행위체

#### 가) 개념

-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로,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이 있다. [2002-12]

#### 나) 장점 [2002-12]

- 국제 사회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 다) 단점 [2002-12]

- 국가 주권을 침해하여 자주성을 위협할 수 있다.
- 비정부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자립성과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2017-A-8]

[2017-A-8]

비정부기구(NGO)들은 자신들이 광범위한 집단들의 진정한 목소리나 공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비정부기구들에서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의 특수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비정부기구의 자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비정부기구의 자율성, 독립성 및 보편성 그리고 책임성 및 공공성을 평가하는 근거로도 중요하다. 또한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자금이나 자원을 아직도 정부나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기구의 자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의사소통과 정보의 개방성 및 공개성 등은 민주적 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인사, 운영, 자금출처, 지출 내역과 지출처 등을 공개하는 비정부기구들은 일부분이다. 이것은 비정부기구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부기구의 자립성과 투명성은 비정부기구들의 보편적 책임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3) 국가 내부적 행위체

### 4) 영향력 있는 개인

## 라. 현실주의 [2018-B-2] [2023-A-8]

- 1) 국제정치의 핵심적 행위자는 국가이다. [2009-1차-15] [2023-A-8] → 국제기구나 초국적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위체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비해서는 사소하게 취급한다.
- 2) 국가는 침투 불가능한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다. [2009-1차-15] [2013-1차-18]
- 3)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핵심적인 이익은 안전 보장 즉 군사적/정치적 측면에 있다. [2018-B-2] [2023-A-8]
- 자국의 이익이란 상대적 이익인데, 이것은 자국의 이익이 협력하는 상대 국가가 갖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A-8] → 국가 간 협력이 힘든 이유는 타국의 배신에 대한 우려와 상대적 이득의 성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23-A-8]
- 따라서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일 뿐이다. [2023-A-8]

[2013-1차-18]

국제관계에서 국가 이익, 국가의 강화,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을 대변한다.

[2018-B-2]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국과 을국 중에서 군사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에게 유리하게 국경이 정해지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국의 군사력이 현재 비슷하다면 양국은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 1) 고전적 현실주의 (Hans Morgenthau)

- 세력균형을 통해 국제정치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세력균형은 왈츠와 같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달성된다.
- 다만 세력균형이론에는 내재적 취약성 3가지가 있다. 1) 불확실성(uncertainty): 타국의 세력은 물론 자신의 세력도 측정하기 어렵고 2) 비현실성(unreality): 자국의 힘이 타국보다 앞서야 비로소 세력균형이라 생각하며 3) 부적합성(inadequacy): 세력균형만으로 국제정치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념이 세력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2009-1차-15]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이다. 정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힘을 추구하는 권력투쟁 과정이며, 힘의 효과적인 조직체인 국가들 역시 국가이익을 추구한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강한 국가가 탐욕을 부릴 때 전쟁이 일어난다.

### 2)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 (Kenneth Waltz) [2025-B-9]

- 인간, 국가, 그리고 국가를 기본으로 한 국제체제라는 세 요소는 국제관계, 특히 전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25-B-9]
-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을 국가 이상의 상위 권위의 부재(무정부 상태)와 국제체제의 힘의 배분으로 본다. [2020-A-7] [2025-B-9]
- 국제체제의 구조는 구성단위들 간의 질서를 규정하는 원칙, 각 단위들이 행하는 기능, 그리고 단위들 간의 능력

(capability) 배분 등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국제질서는 당연히 무정부적이며, 정치구조의 단위인 국가들의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한 국제적 결과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차원인 **단위들 간의 능력 배분**이다. [2020-A-7]

- 국제질서의 변화보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국제레짐에 관한 견해

-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반영하는 해결책이 하나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레짐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이에 순응한다. [2010-1차-15] → 힘의 논리에 의해 순응

- 정책조정 실패, 즉 무정부 상태에서는 상호 원하는 목적이 같더라도 의도와 달리 이를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국가들은 레짐에서 활동한다. [2010-1차-15]

[2025-B-9]

왈츠(K. Waltz)에 따르면, 인간, 국가, 그리고 국가를 기본으로 한 **국제체제**라는 세 요소는 국제관계, 특히 전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는 각 요소의 핵심 원리를 세 명의 사상가의 주장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스피노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들어 폭력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이성보다는 정념과 이기심을 앞세우는 본래적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물리적 폭력에 끌려 빠진다. 즉 인간의 불완전성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칸트의 정치철학의 목표는 모든 국가들이 전쟁의 고통과 참화에서 진지한 교훈을 얻어 힘이 아닌 법치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각 국가의 내부적 개선이며, 두 번째 방안은 국가 간 관계에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칸트의 이러한 생각은 윌슨(W. Wilson) 등을 거쳐 오늘날의 ㉠'민주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루소는 '서로 다른 특수성 사이에서의 사고 발생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을 쉽게 풀면, ㉡'무정부 상태'에서는 국가의 성격과 무관하게 평화 정착이나 국제 협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왈츠는 이들 중에서 루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국가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지도자의 인간성도 아니고, 국가의 속성도 아닌 오로지 국제체제의 수준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왈츠의 이론은 전쟁의 원인으로 '국제 정치의 구조적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권력욕과 국력을 중시한 전통적 주류 이론과 구분되어 **구조적 현실주의**로 불리고 있다.

### 3) 세력균형이론 (Kenneth Waltz)

[2011-1차-17]

세력균형체제는 **행위자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체제가 안정**되고, 국제 사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행위자가 제어 당하지 않고 힘을 행사할 때 체제의 안정이 위협받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행위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2012-1차-16]

(나) 각국은 그 자신의 국력을 극대화시키고 상대국을 견제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며, 어느 국가의 패권적 지위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균형 상태가 평화를 가져온다.

(라) 주목해야 할 행위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다극 체제가 양극 체제보다 개별 행위자의 선부른 판단을 방지하여 강대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 → Morgenthau의 견해

(마) 양극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적국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오판을 감소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축소하여 초강대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 [2020-A-7] → Waltz의 견해

[2018-B-2]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국과 을국 중에서 군사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에게 유리하게 국경이 정해지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국

#### 4) 패권안정이론 (Robert Gilpin)

- 패권국이 그 체제의 규범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 질서의 안정은 그 질서를 보존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패권국에 의해서 성취·유지될 수 있다.** [2012-1차-16]
- 역사적으로 패권국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쇠퇴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국이 가져다주는 **수익은 줄어드는 한편 제국 유지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게다가 힘의 유지를 가져다주던 기술마저 외부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 신현실주의 한계를 극복했다.

#### 5) 세력전이 이론 (A. F. K. Organski)

- ‘**힘의 압도적 우위**’가 존재할 때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2015-A-서술2] 이견 Gilpin과 동일
- **국력으로 대표되는 ‘능력’과 현존 질서에 대한 만족도로 대표되는 ‘의도’를 기준으로 국제정치의 안정성을 분석하는데, 현존 질서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강대국(도전국)이 지배국과 비슷한 국력의 위치에 도달하고 패권국이 평화적 패권교체를 부정할 때 전쟁이 발생한다.** [2015-A-서술2]
- 패권국의 유연성이 높고, 도전국이 현존질서에 만족하거나, 패권국이 다른 전쟁에 도전국의 도움을 받거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갖추는 등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평화적 세력전이가 가능할 수 있다.
- 국력전환의 세 국면 : 잠재적 힘의 단계, 과도기적 성장 단계, 힘의 성숙 단계
- 국가군 : 패권국, 강대국, 중진국, 약소국
- 국제체제는 패권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체제

#### 6) 공포균형 : 핵 억지력

- 어떤 국가가 핵무기나 재래식무기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그 국가 스스로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또 다른 핵보유국을 공격한다면 곧바로 보복공격이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양측의 피해가 너무 커지는 만큼, 핵무기 공격을 피할 것이라는 논리다. [2008-10]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체제(MD)로 탄도탄요격의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적의 핵전력을 무기력화함으로써 미국의 핵전력 우위를 추진하고 있다. [2008-10]

### 마. 자유주의 [2018-B-2]

- 1) 국가간 대립과 전쟁은 국제관계의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잘못된 제도나 지도자에 의한 일탈이다. → 자유주의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면 보다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2018-B-2]
- 2) 국제관계의 핵심적 행위자가 국가이며,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를 부정한다. → 자유주의자들은 평화와 국제질서가 전적으로 한 국가의 힘으로 형성된다고 믿지 않는다. 대신에 주권국가들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장치들은 **국제레짐이나 국제기구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안전보장**을 지지하였다. [2020-A-7] → 국제기구가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초국가행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독립적 영향력과 자율성을 갖는다고 본다. [2023-A-8]

#### 1) 복합적 상호의존 이론 (R. Keohane & J. S. Nye) [2013-1차-18] [2023-A-8]

- 국가를 침투 불가능한 독립적 단위로 간주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국가의 침투성(permeability)을 강조한다. [2013-1차-18]
- 국제사회의 행위자들 간 상호의존이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사이의 연계성과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2023-A-8]
- 국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국제정치가 훨씬 다국적 기업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와 집단에 의해 형성되며,

- 그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적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3-1차-18]
- 국가 내부의 이익집단, 사회세력, 관료기구 등이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시한다. [2013-1차-18]
- 국제관계에서는 모든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견제 속에서 활동하므로 국가의 대외 주권은 온전한 자율성으로 축소된다고 본다. [2013-1차-18]
- 국가 간 관계가 군사적 힘과 같은 강제력에 좌우되지 않고, 경제, 환경,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 의존이 강화된다. 이때 상호의존을 설명할 개념으로 **민감성**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변화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낸다. **취약성**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외부 변화에 대한 대안 여부를 의미한다.

## 2) 민주적 평화이론 (Immanuel Kant 영구적 평화이론 → Neo-Kantian)

- **민주정부가 비민주정부보다 전쟁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그 이유는 민주국가가 가지는 규범에 의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다른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여 전쟁이 억제된다.** [2018-B-2] [2025-B-9]
- 모든 국가가 공화정부 채택하는 것이 분쟁 해결법.

## 3) 집단안전보장 (W. Wilson의 이상주의) [2020-A-7]

- 집단안전보장체제는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집단안보기구에 가입하고, 만약 어느 행위자가 이러한 약속을 위반할 경우 모든 행위자가 집단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약속하는 체제이다. [2011-1차-17] [2020-A-7]
- **평화애호 국가군의 힘이 도전국보다 훨씬 우세할 때, 평화파괴자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있을 때, 그리고 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무력사용 의지가 있을 때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2020-A-7]
-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W. Wilson)의 주창에 따라 설립된 **국제연맹**의 실패는 이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2020-A-7]

## 4) 신자유주의 -> 상호의존론으로??

-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라는 현실주의의 전제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실주의의 주장처럼 국제관계가 대결 일변도가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국가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이 가능하다.
- 즉,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게임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게임이라면 협력이 가능한데, 국제관계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 절대적 이익이란 국가간 교류·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절대적 수치로, 상대적 이익(국가 간의 상대적 이득의 차이)을 추구한다고 보는 현실주의와 대비된다.

### • 국제레짐에 관한 견해 (지문 모음)

-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경쟁적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배반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2010-1차-15]
- 죄수의 딜레마 게임 논리를 이용하여,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이 협동적 전략을 포기하는 것을 설명한다. [2010-1차-15]
- **게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최적의 상태를 산출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협동의 전략을 택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2010-1차-15]
- **국제제도가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2010-1차-15]
- 레짐이 형성·촉진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다른 모든 국가들이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호성의 원칙**을 국가들이 고려하기 때문이다. [2010-1차-15]
- 국제법은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일 뿐이거나, 또는 현존의 국제 질서를 정당화시킬 뿐이라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평화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제 행위자들이 규칙 준수의 이득이 규칙 위반의 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법을 지키기 때문이다. [2011-1차-17]
- 국제 사회에서 국제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제 제도가 국제 협력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 사찰·검증·군축 레짐 등 안보 레짐을 통해 **평화는 관리·유지될 수 있다.** [2012-1차-16]

## 바. 구성주의 (A. Wendt)

- 국제정치의 현실은 역사적, 간주관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각국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 국가들은 세계 정치 내에서 **분쟁에 관련된 규범의 확산과 관념의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다. [2018-B-2]
- 따라서 국제기구는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2023-A-8] → 따라서 국제협력의 정도는 개별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관점에서는 ‘배타적인 최고 권력이자 대외적 자립’을 의미하는 개념인 주권조차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2023-A-8]
- 이러한 미국의 핵 전략을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미국이 객관적인 물질 자원보다는 **공유된 지식**에 의해 핵전략을 추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8-10]

[2023-A-8]

국제 협력의 정도는 개별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관점에서는 ‘배타적인 최고 권력이자 대외적 자립’을 의미하는 개념인 주권조차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사. 국제정치경제

### 1) 발전국가 [2008-9]

- 효율적, 독립적, 자율적인 관료 조직이 정책을 주도한다. [2008-9]
-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쓴다. [2008-9]
- 신중상주의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추진한다. [2008-9]
- 패권국은 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수호자로, 국제체제는 패권적 구조다.
- 각국은 그 자신의 이익을 반영한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타국의 희생도 감수한다. 증가된 경제관계는 국가간 경제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 아. 기타

- O. Franks 남북문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발전 및 소득 격차에서 생기는 국제정치 및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표현한 것
- J. Nye 연성권력/경성권력 : 연성권력이란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으로,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 S. Strange 구조적 권력